

제332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국회 사무처

2015년4월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2.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부의된 안건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1
- 2.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제출) ..... 8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계속) ..... 8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0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여덟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백군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서민들 허리가 끊어질 지경입니다. 높은 자살률, 청년 실업, 전월세 폭등, 가계부채 등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부족한데 사자방과 같은 권력형 비리의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또다시 거대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일부 가진 자와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러한 대형 비리를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지 떠올리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고인은 말이 없고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사자방과 같은 권력형 비리들이 묻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사건을 몰타기하거나 정쟁화하기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데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 날인데요. 안보에 크나큰 위협을 주는 사안이 발생해서 구체적인 안보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도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아무 안보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 고생하십니다.

성 전 회장은 현 정부가 계획을 하고 사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대상 1호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고인께서 왜 저를 사정의 1호라고 했는지 제가 그 심정을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40년 공직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저도 아침에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3월 12일 국무총리 담화와 3월 18일 고인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 사실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오해를 하고, 제가 사정을 기획했고 제가 지휘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던데, 또 3월 22일 날 어제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저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문에 나온 녹취록을 보니까 저에 대한 대단히 서운함과 섭섭함을 토로를 했는데…… 글썄요, 저는 왜 그분이 사정 1호로 지목을 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런데 어제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완구 총리님을 존경합니다마는 몇 가지 참, 정말 총리라는 자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지엄한 자리지요? 그래서 언행이 좀 신중하면서 진솔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거짓답변을 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고 성완중 전 의원으로부터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경향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3000만 원을 줬다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어제 말씀을 올렸지만 저는 성완중 회장과는 특별한 개인적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같은 동향 출신이고 또 현역 국회의원을 그분이 지내셨기 때문에 또 나쁜 이유도 없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분과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포럼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2007년에는 송사가 있었고 그리고 같은 동향이다 보니까, 같은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만난 것 자체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본인과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거짓답변이라고 했는데 거짓답변한 것 없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래서요……

**○국무총리 이완구** 다만 본인하고 심경을 털어 놓고 말씀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 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유추해서 3월 22일 날 본인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돌아가신 날짜하고 약 보름 이상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3월 22일 날 마지막 통화가, 핸드폰을 조사를 해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 왜 저한테 전화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 점을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3월 22일 전화를 하고 돌아가신 게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는 안 했습니다.

(「3000만 원 받았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백군기 의원** 그래서 우선 하여튼 30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진실이 뭐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백군기 의원** 확실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어제 ‘새벽에 한 열다섯 번 전화를 시도를 하시고 서너 번 전화 통화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이것과 연관된 어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화를 하신 건 아니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아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 신문에 ‘이완구를, 이완구를……’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저하고 제가 도지사 당시에 친분이 있는 분이

었기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자기 이름을 제가 아는 사람이 거론했다는데 전화 안 하는 것도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 통화인가 네 통화를 했고 나머지는 통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전화받기를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전화를 해서 통화가 신호가 간 것이지 통화 자체는 서너 통화뿐이 안 됩니다.

○백군기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3000만 원은 절대 안 받았다, 또 전화 통화할 때도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이완구 3월 22일 날 얘기입니까?

○백군기 의원 예. 어저께……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것 없습니다.

○백군기 의원 전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백군기 의원 전화 통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제 휴대폰 언제든지 제출하겠습니다. 떳떳하게 제출……

○백군기 의원 그다음에 2012년 대선 때 선거운동을……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백군기 의원 2012년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오전에는 지병으로……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요?

○백군기 의원 예, 오전에는 지병으로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2002년, 정확하게 보면 제가 1월 초순경에 입원을 했습니다, 급히. 건강검진을 하니까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혈액암으로 판명이 되어서 즉시 순천향대학에 입원을 했다가 3주 정도 있다가 도저히 상황이 안 좋아서 성모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이송이 되어 가지고 성모병원에서,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쪽 가다가 10월 달까지 퇴원과 입원을 거듭하면서 있다가 11월쯤 해서 퇴원 아닌 퇴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 사진을 보면—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대단히 부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012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12월 18일 날이 선거 전일 아닙니까? 그때하고 그다음에 12월 초순경에 유세장에 두 번 정도 부운 얼굴을,

부운 얼굴이 있는 상태로 갔던 것 외에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충청권에서 제 이름을 가지고 명예 무슨 선대위원장 직책이 있는 것은 제가 사후로 들었습니다.

○백군기 의원 물론 아마 몸이 아프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행동하는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되었겠지만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여기 함께하신 여야 의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당시에 유언장을 써 놓고 있을 정도니까, 제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았다는 것은 다 아시지요? 여기 같은 충청권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백군기 의원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때 충남지역에 붙었던 플래카드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동일한 문구의 동일한 어떤 기획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총리님은 어제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누가 기획해서 한 것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충청포럼에 그것을 했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저는 충청포럼에 있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플래카드가 어느 특정 단체에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고받기로는 충남북·대전·세종까지 했다는데 충남북·대전·세종, 4개 시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충청포럼에, 누가 그러한 일을 했으며 지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치하는 입장입니다마는 4개 시도에 1000개 이상의 플래카드가 붙을 때 어떤 특정 단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의 내용이나 품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누군가 지시가 되어서 한 것이지 그냥 그것이 일개인들이 다 했는데 그렇게 똑같은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지금 세상이 어느 특정인이 지시한다고 그런 것이 수천 개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백군기 의원 총리님,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 많은 플래카드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붙었는데 일체 지시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뭐 조직적으로 한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여기 자리를 함께하신 천안을 지역구로 하신 의원님께서도 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다 우리가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청권에 있는 여기의 야당 의원님들께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걸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백 마디 말씀을 올리는 것보다는 충청권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의원님들, 저도 국회의원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 제가 지역구 활동한 것 사실 아닙니까, 총리 이전에? 그리고 또 같이, 여야 의원들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정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가면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붙었는지 왜 붙었는지 누가 비용을 냈는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여기서 공방전 벌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붙인 게 뭐가 잘못이 있어, 그게?」 하는 의원 있음)

○백군기 의원 총리님,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총리님의 말씀을……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리고 그 말씀은 충청권, 충청인들에 대해 좀 거북한 말씀들입니다.

(장내 소란)

충청인들이 그러면, 이완구가 그러면 지시해서 충청도 사람들이 붙었던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받은 거 제대로 답변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백군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충청권의 어떤 부분을 그거 한 게 아니고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이걸 누가 조직적으로 지시한 그것이 없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완구가 어떻게 작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충청도 사람들이 이완구가 했다 그래서 그걸 조직적으로 그렇게 붙이겠습니까?

○백군기 의원 아니, 왜냐하면 문제는 그 플래카드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

같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똑같은 어쨌든 간에 그건 유권자 내지는 국민들한테 대단히 걸레되는 말씀이지요. 이완구가 작용을 해서 붙었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건 유권자 내지는 충청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그런 말씀은.

○백군기 의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좀 유감이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저도 유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백군기 의원 저는 충청에 대한 어떤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백군기 의원 그 플래카드 내용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어느 조직이든 개인이 조직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완사모’라고 하는 팬카페가 있습니다. 충청도에는 이완구를 사랑하는 팬카페가, 한때 몇만 명 수준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분들끼리 연락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백군기 의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총리님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것을 전체를, 그 많은 플래카드가 똑같은 내용으로 붙었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뭐가 좀 있었기 때문에 된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구를 사랑하는, 카페 이름이 ‘완사모’입니다. ‘완사모’가 한때 몇만 명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카페 회원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붙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얘기해 가지고 플래카드 붙였든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일부에서 나왔던, 충청포럼에서 그런 걸 했다 그러는데 저는 충청포럼의 어떤 사람하고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백군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정리하고요, 안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천안함 5주기를 맞았습니다.

총리님, 잠깐 들어가 주세요.

당시 참혹한 천안함의 잔해는 군의 뼈를 깎는 대혁신을 요구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혁신의 성과와 결실을 보기도 전에 군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각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치권은 국방개혁 등 막중한 임무를 완수해야 할 군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임에도 최근 국회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들이 있어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세요.

며칠 전에 여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들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 내용을 보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안보정당은 말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내용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또 각론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북과 사드(THAAD), 천안함 폭침, 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보이기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보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누리당 대표연설에서 안보정당을 내세운 새정치연합의 안보 이 문제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정당을 떠나서, 당을 초월해서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백군기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당의 안보에 대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와 관련되어 일부 의원들의 돌출 발언과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 등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와 보수정권의 국방 분야 주요 심 과제들을 비교해 보면 보수정권의 안보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국방 예산입니다.

국방에 대한 진정성은 예산으로부터 출발합니

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 예산은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4%, 연도별 8.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MB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4.5%, 연도별 5% 증가로 국방개혁을 지체시키고 전작권 환수 시점도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통계는 제가 오늘…… 구체적인 것은 처음 접합니다.

○백군기 의원 국방개혁은 어떻습니까?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네 번의 수정 끝에 현재는 14-30 계획으로 누더기가 되었고 현 정부 말까지 뚜렷하게 완료되는 것이 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차기 정부로 미루어 놓아서 국방개혁에 대한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저는 이 국방 문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권이든 다 튼튼한 국방, 안보를 위해서 힘써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군기 의원 그리고 이제 장병 복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병사들의 봉급을 연평균 34.6%씩 5년 동안 2.8배를 인상시켰으나 MB 정부는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고 현 정부는 대신 공약으로 봉급 2배 인상을 약속했지만 참여정부에 비하면 매우 부족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더욱 주목할 점은 월급이 올라도 병사들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등병을 기준으로 보면 월급 12만 9000원을 받지만 본 의원이 계산한 결과 하루 담배 반 갑, 생필품 구매 등 한 달에 24만 원이 소요돼 적자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봉급 2배 인상은 커녕 적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총리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군기 의원 개선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백군기 의원 다음에는 보훈정책과 제대군인

취업률입니다.

슬라이드 앞 장으로.

참여정부는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MB 정부는 보훈처장을 차관급으로 격하시켰고 현 정부는 각종 보험 및 보상법안을 국가재정을 이유로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군인 취업률은 현재 57%로 2008년 참여정부 말기와 거의 변동이 없고 일반 사회 고용률 60% 수준과 외국의 제대군인 94%에 대비하면 지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총리님, 현실이 이런데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 경청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또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남북 관계는 어떠한 분쟁이나 교전도 없었습니다. 보수정권 이후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두 번의 도발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50여 명의 장병과 시민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사적 조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 실망만 주었을 뿐입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 남북 관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군기 의원 얼마 전에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문제는 국가통일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서 기획하고 이와 일치된 방향으로 통제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정부의 책무입니다. 아무 단체나 중구난방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다면 정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문제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의 상충 부분인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에서도 또 의원님의 걱정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우리 국가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종합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의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백군기 의원 이것은 국가가 철저히 계획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안보와 관련해서 예산 뒷받침, 국방개혁, 병사 및 제대군인과 보훈가족의 처우 개선, 위기관리 능력 등 어느 것 하나 MB 정부와 현 정부가 더 잘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의 사안마다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드 배치, 테러방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도 이분법적 안보 프레임, 이것으로 몰고 가는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진영 논리를 초월한 통합의 정치·안보 분야야말로 그러한 자세가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안보 문제의 이분법적 또는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역대 정권을 떠나서 이 안보 문제는 국가 안위의 문제로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군기 의원 장관님, 나와 주세요.

예, 국방부장관님.

우리 총리님께 질의할 내용인데 총리님이 너무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가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은 지금 무엇이라고 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입니다.

○백군기 의원 그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군기 의원** 예.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핵 실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 플루토늄을 한 40여kg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우라늄 계획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핵실험이 일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러면 우리의 여기에 대한 기본 대응전략은 뭐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기본전략은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이고 그것을 보다 구체화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입니다.

○**백군기 의원** 사드 배치만 하면 핵이 해결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배치는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백군기 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 자신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상호확증과괴에 기반한 억제전략을 한미동맹을 통해서 했을 때 그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또 핵 보유국 5개 국가 외에도 핵 보유 예상 국가들이 다수 있지만 히로시마에 투하한 것 말고는 핵전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없었습니다.

○**백군기 의원**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핵을 폐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미국이 보유한 핵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사용 의도를 억제를 해야 됩니다.

상대가 핵을 발사하고 나서 방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에서는 우리 당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핵을 보고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정당이라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핵무기가 날아올 때 공중에서 요격하면 우리 피해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중에서 요격하면 핵무기의 기폭장치가 해제되기 전에 하기 때문에 핵무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것은 증명되지 않았어요. 전문

가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는 과학기술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핵 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가 발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 논리를 나중에 한번 제공해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래서 일단 북한에서 핵이 발사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재앙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중간에 사드로 맞히겠다, 사드가 100%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사드나 PAC-3나 적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핵이라고 하는 건 치명적인 거예요. 상당한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지요. 핵이 발사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에 대해서는 절대무기라는 관점에서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확증과괴 또는 상호취약성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 핵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군사적 외에 정치, 경제 또 정보 이런 수단을 종합해서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지금 이란이 핵 폐기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걸 참고해야 돼요. DIME 요소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돼요. 군사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면에서 유사시 초기단계의 즉응능력 제고 차원에서, 확보 차원에서 우리 군이 말씀하신 킬체인, KAMD 능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사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묻혀 버렸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건 사드와는 별도로 우리의 자체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그걸 아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들어가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때면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입니다. 그러나 한미가 같이 가기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같이 가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진보와 보수도 여야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을 모아 함께 가는 총력 안보가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백군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다음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의사 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제출)

(10시38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의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北亞歷史歪曲對策特別委員長職務代理 金世淵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세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아베 정부는 왜곡된 역사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변에 두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침탈 및 역사왜곡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6일에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 우리의 불법점유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정 승인된 교과서에는 이미 일본 학계에서도 폐기된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마치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조공을 한 것처럼 표현하는

등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날조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날조된 내용을 포함한 교과서 문제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간 미래 세대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과 국회 그리고 외교부를 비롯한 전 정부 부처가 함께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일환으로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날조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결의안의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계속)

(10시42분)

○의장 정의화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곡성 출신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 저는 지금 상황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부패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또 모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특검이 됐든 또 다른 것이 됐든

또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손 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국민이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로비와 실패한 로비, 한 정부는 로비가 잘 통했던 정권 또 다른 정부는 로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정권, 이 극명한 차이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와 주세요.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그 차이점이 뭐라고 장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모든 정부들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통일정책을 수립해 왔지만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실질적 통일 준비를 강조하면서 통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 과정 및 통합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민관 협동으로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의원** 그런 점을 포함해서 어쨌든 통일은 국민들과 함께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 특정 정권의 어떤 성과에 급급한 다든지 또 불투명하게 물밑으로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고 남남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정현 의원** 역대 그런 점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 공감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통해서 통일 문제를 공론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통일준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준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통일준비위원으로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들을 많이 포함

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문단 또 국회와의 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문제는 정치적으로 여야, 진보·보수를 다 아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에도 소위 진보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여야 정책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으로서도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것은 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통일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보다 많은 정보를, 물론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 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 중인 것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일부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요즘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질감이 생겼고, 특히 북한의 도발 등 그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통일비용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비용이 많이 들

면 내가 뭔가를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의원**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일비용, 분담비용,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비용은 사실 통일 과정과 통일됐을 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55조부터 수천억에 달하기까지 그 비용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일비용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부도 공식적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액수를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비용의 문제점을 부각을 시키고, 특히 통일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단으로 인한 비용, 특히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손해 이것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이 가져오는 이득이 통일비용보다 더 크다는 점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정현 의원**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대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 요즘 젊은이들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통일비용 문제를 결국 경제 문제, 세금 문제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분담비용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지, 정부에서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말씀하셨듯이 사실 '통일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통일의 이득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정부에서는 통일비용과 분담비용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대차대조표를 딱 만들기 어려운 것이 지금 통일비용은 굉장히 경제적인 차원의 접근이고, 분담비용 문제는 우리가 분단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실제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딱 일률적으로 대차대조표를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알

기 쉽게 분담비용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과 통일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거대한 인문학의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통일된 국가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될 남북한 주민들 간의 교류와 접촉, 즉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적 접근은 통일 문제를 앞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의원** 그렇다면 우리의 젊은 인문학자들이 통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민간연구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용의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의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다음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최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가 잘 풀리고 있을 때는 역설적으로 북한인권법을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지금 북한인권법 문제는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또 앞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기의 유불리를 떠나서 빨리 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내에서 그동안 북한인권법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 당을 제외한 지금의 야당들도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땀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통합안을 제출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논의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인권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이 기회에 장관님께서 국민들 앞에 왜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한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 인권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또 앞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통일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이 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그래서 행복한 통일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북한인권법 제정에서 뒤쳐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하루속히 인권법 제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다음에 국가의 기본책무 중 하나는 국민보호입니다.

최근에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세 분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누구누구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김정욱 선교사하고, 그 외에 최근에 또 추가로 억류된 최춘길 씨, 김국기 씨가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이분들에 대한 정부대책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정부는 북한에게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고, 또 외교채널이라든지 유관기관에게 이들의 인권보호와 송환·석방에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문졌습니다.

처음부터 남북한 간의 공동운영체제로 돼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개성공단은 그 출발부터 사실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켜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한 다라는 그런 정신에서 개성공단을 시작했습니다.

○**이정현 의원** 아니, 정신 말고 실제로 시스템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실제로도 북한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위원회가, 물론 형식상은 북한기구로 돼 있습니다마는 남쪽의 인사가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개성공단 관련한 여러 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 법규들이 개성공단이 북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남북한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관련되어서는 남북 간의 합의가 법규에 상당하는 그런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남북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의원** 그러면 지금 북한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통보를 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합의에 위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당연히 그런 합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부터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고 특히 2013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이후에 저희가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켰고 그때도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임금 및 여러 제도 문제들을 논의하도록, 그리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이 부분은 앞으로 합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을 어떻게 유도할 생각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존의 합의에 따라서 이행되고 특히 공동위를 통해서 제도의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점을 북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선 공동위가 어려우면 북한의 총국과 관리위원회 간에 임금 문제를 협의하도록 지금 계속 북한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도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전망이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일단 북한

이 관리위, 중국 간의 협의에는 응했습니다. 물론 기본입장만 얘기했지만 일단 협의에 응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지속 노력을 해서 북한이 협의를 통해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장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지요?

축구 등 비정치적인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추진 중인 사안이 있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는 민간 교류, 특히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이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특히 문화나 스포츠 교류 이렇게 남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의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특히 남북한 모두 관심이 있고 상징성이 높은 축구 교류라든지 다양한 스포츠 교류들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지금 4월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거나 접촉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쉽게도 현재 당국 간에 구체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민간 차원에서의 접촉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당국 간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함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대통령께서는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 축구경기를 성사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것이 좀 어렵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광주에서 개최될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북한을 통한 성화 봉송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아직 남북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조직위에서 백두산과 광주 무등산에서 동시 채화를 해서 합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조직위를 통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의원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접촉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 홍용표 이번에 지금 조 추첨 관련해서 북한 대표단이 지난주에 방한을 했었고요, 광주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논의를 했지만 아직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지금 한미 간에 군사훈련 기간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맞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 기간 중에 북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 추첨 등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또 조직위와의 접촉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응원단이라든지 성화 봉송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정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앞서 부산에서라든가 대구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이미 조직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련 사항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조직위와 긴밀히 협조해서 광주 U대회가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의원 진전이 있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여러 가지 지원 문제는 국제 관례나 과거 선례에 따라서 또 그 역시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

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현 의원** 5·24 조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5·24 조치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대화에 나와서 5·24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이제까지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산가족 문제까지 5·24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등 대화에 굉장히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자라고 하는 우리 정치권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5·24 조치는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해서 우리의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그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또 반복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반복된다면 교류협력은 또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교류협력을 원활히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진짜 잘 진행이 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북한이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대북 특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본인이 야당 시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북 특사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 한 번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여러 차례 당국 간 대화를 제의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그런 대화 제의에 대해서 지금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결국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중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어떤 구체적인 안이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현 의원**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재임 기간 동안, 지금 재임 중이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분단 고통 해소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몇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형태로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할 그런 계획이나 의지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정상회담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신뢰를 쌓고 또 실무적인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북한의 대화 거부로 인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게 지금 대화에 나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논의가 된다면 그때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의원** 현 정부에서는 비공개 접촉은 안

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전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런데 비공개 접촉을 해서라도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의원** 상당한 뉘앙스가 있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모시겠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외교장관회의가 있었지요? 언제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지난 3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 자리에서 일본 중국을 포함한 정상회의 조기 개최 합의를 했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가능한 한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현 의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러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3국 협력 체제를 복원시키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외교장관회의도 기본적으로는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나 이제 역시 아직까지도 일본과 중국과 양자 관계를 포함해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봐 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의를 복원해서……

이 체제는 결국 우리가 주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도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할 수 있기를……

○**이정현 의원**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러면 의장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를 해 갖고……

이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국익에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교장관……

○**이정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만에 저희 주도로 외교장관회의를 복원시킨 겁니다.

○**이정현 의원** 최근의 한미·한중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쭙 보겠습니다.

한미·한중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꼭 어떤 평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과 이번에 방한했던 카터 국방장관 또 중국에서 오는 고위 인사들 모두 현재의 양국 관계를 다 최상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일부 어떤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긴밀한 관계를……

‘한미와 한중을 꼭 제로섬 관계로 볼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화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은 미·중 사이에 끼어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그렇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가끔 가다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략적인 이해를 달리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익에 입각해 가지고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정현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좀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한 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국익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 또 우리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고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정현 의원** 아니,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우

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은 지금까지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가장 좋은 상태다. 최상의 상태다.” 이런 얘길 했고, 이번 카터 국방부장관도 방한 시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길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미동맹 약화로 보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국민적인 시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역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일본을 두둔한 듯한 미국 관리들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그 발언을 했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좀 다르게 보도가 됐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보도가 나온 이후에 미 국무부나 미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성명이나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또 한국이 취하고 있는 그런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또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독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보인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인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 대변인 논평을 보게 되면 작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얘기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한 입장, 이런 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중국도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강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또 이런 데도 한중 관계 괜찮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외교부장관 윤병세** 한중 관계는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좋은 관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상의 관계라고 중국 측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드 문제든 아니면 여타 문제든지 간에 어떠한 시각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신뢰 관계에 입각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끔 다 대항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를 갖고 정치권에서……

아마 오늘도 여러 분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교상·안보상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외교·안보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드 문제든 여타 민감한 국가 안보 문제든 저희 정부로서는 국익에 입각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일본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정부 조치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저희가 취하고 있는 대외정책을 조용한 외교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본의 역사 도발 문제는 한일 관계를 넘어서 이미 벌써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사이고 우려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저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발언들이 나왔고요. 또 각국 의회에서의 결의안도 나왔고 또 최근에는 미국 역사단체들, 역사학자들 19명이 공동의 연서로 발표도 하고 기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요한 외국 언론들이 거의 수없이 바로 지난, 어제 그제도 보도를 했고요. 수없이 많은 양심 세력의 공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조용한 외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또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이웃 국가와 대립각만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현명한 일이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또 슬기롭게 나갈 때는 해를 발휘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이 바로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비록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제 문제라든가 문화 문제라든가 또 북핵 문제와 같이 전략적인 이해를 같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일본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세적으로 대미 로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런 대미 로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특히 물량 공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보다 한 34배 정도의 공공외교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게 물량 외교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양심 있는 세력들을 설득하거나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마음을 사는 외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더 보완하고 또 앞으로 더 이런 양심세력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일본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정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공공외교에 우리 한국의 34배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 차원에서 엄청나게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과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 내부에서도 이런 공공외교 조직을 지금 강화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가지고 금년에 공공외교 예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과 더불어서 조직을 더 보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대한 저희의 공공외교 정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정현 의원**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갔을 때 감성외교,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가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렇게 공공외교를 확대할 그러한 방안, 필요한 예산과 조직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박

근혜 대통령의 중국의 공공외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특히 재작년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칭화대 연설 때 제가 직접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요. 또 중국 CCTV와의 인터뷰라든가 또 대통령의 자서전이 15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공공외교의 성공사례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대한 이런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을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를 구사를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공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큰 도움이 됩니다. 원래 국제사회에서는 자기네 나라 말을 쓸 수 있는 정상과 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정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외국을 몇 번 나가 봤는데 과거의 아버지 시절부터 시작해서 또 본인이 퍼스트레이디 대행을 하면서 맺었던 친분외교, 그 부분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의 외교는 점점 정상외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외교가 1년에 거의 3~4개월씩 길어지는 정도의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번 중동순방에서 보시듯이 어려운 수주, 수십억 불짜리 수주도 정상들의 결정에 따라서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 또 손톱 밑 가시 같은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야당 시절에 당시 대통령이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르는 외교정책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외교 전략이 구사되고 있습니

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도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마음을 사는 외교, 즉 신뢰외교로 일컫습니다. 그래서 양자 차원을 넘어서 지역 외교 또 글로벌 외교 이 모든 분야에 저희 내실을 쌓고 저희 국력에 걸맞은, 그런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뢰외교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독도에 관해서 일본의 도발이 증가되고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 이것이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에 많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독도는 저희의 주권이 확실하게 미치는 지역이고요,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서 저희의 영유권을 아주 분명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어떠한 도발을 붙든 시비를 붙든 그것이 저희 독도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확고한 입장에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왔고 또 앞으로도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채택된 국회에서의 결의안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과 애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참여 결정시기를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좌고우면 하느라고 적기를 놓쳤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IIB는 저희 정부가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손상을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최대한도로 극대화하면서 또 모든 이해관계 당사국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가장 적기에 들어간 그런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분 협상에도 저희가 이러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놓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이러한 우방국들의 어려운 입장도 감안하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정현 의원** 그렇게 결정을 늦춤으로써 우리가 거둔 실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분 협상에 전혀 영향이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 앞으로 AIIB

의 고위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초기 원당사국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혜택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누릴 수 있도록 외교 노력 또 우리 해당되는 그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정현 의원** 유라시아 친선특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이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지금 현재 7월경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 4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맞게끔 실질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과 또 문화계와 또 각계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통과구간에 있는 나라들과도 실질적인 대화나 협의회를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6자 회담, 과거와 다르면 어떻게 상황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오랫동안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좌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자 간에는 북핵 불용이라는 강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제안한 그런 안을 중심으로 해서 탐색적인 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러면 북한과의 그 탐색적 대화, 전혀 지금 추진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입니까,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난 1월 말 이후 두 달 동안 저희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대화를 가능한 한 빨리 갖자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현재 당사국들 간에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진전이 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직까지 진전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탐색적 대화를 하자는 데 대해서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레 남미 순방길에 오르시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세월호 1주기도 있고 또 최근에 이렇게 소망스럽지 못한 사건들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꼭 지금 가야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콜롬비아는 저희의 6·25 전쟁에 참여한 중남미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입니다. 금년에 콜롬비아 대통령께서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 꼭 콜롬비아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저희가 가능한 날짜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마는 저희가 원하는 뒤쪽의 날짜는 가능하지 않고 앞쪽의 날짜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마침 국내에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면서 아마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날짜를 잡은 것으로……

○**이정현 의원** 언제 잡혔던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그것이 저희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다 잡혔습니다.

○**이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경제외교하고 안보외교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없다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묻겠습니다.

FTA 등 경제외교 성과,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경제외교는 정상외교만 예를 들더라도 지난 2년 동안에 한 500억 불 이상의 수주외교를 지원했습니다. 또 방산수주만 하더라도 70억 불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또 최근에 보건의료라든가 ICT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이런 수주지원들이 많이 있고요. 어제 있었던 투르크메니스탄만 하더라도 최소 60억 불 이상의 수주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상외교나 또 외교부를 통한 경제외교가 저희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청년의 외국 진출에 나름대로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한중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가 추진이 됐었지요? 전 세계 시장의 73.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하자면 FTA에 관련한 관세에서의 이익이 미국과 FTA에서는 1조, EU 전체를 합해 갖고 1.5조라고 한다면 중국과는 6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이 FTA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결국 대외 지향적인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는 그간에 DDA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 FTA와 지역 FTA에 많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5개의 FTA를 저희가 추진함으로써 경제영토의 73%,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가지게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의원** 과거를 돌아켜보면 우루과이라운드 때나 한미 FTA 때나 또는 한·칠레 FTA 때 상당히 국민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큰 한중 FTA를 하면서 사실상 그런 일이 없이 굉장히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를 받아 가면서 잘 처리를 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이제 이러한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완 대책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안보외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권정책 그리고 북핵정책 그리고 우리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77 동맹국가들까지도 우리나라의 의견에 많이 동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보외교,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현재 저희의 안보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주변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저희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지지했고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취해 온 아세안도 작년 12월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평구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다 지지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한국 정부의 이런 대외정책,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공감대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왜 장수하는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 한때 어느 정권에서는 침공을 당하고서도 공격을 못 하고 청와대 눈치를 본 적 있었습니까. 공격에 대한 반격을 지휘한 장성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한 불이익을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이정현 의원** 간첩 혐의가 있었던 사람이, 데려다가 조사하고, 정보사령관을 데려다 조사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 조사를 받은 것이 그게 눈치가 아니고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의원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정현 의원**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 지휘관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통령께서는 13년도 4월 1일 국방부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의 판단을 신뢰한다. 적의 위협 및 도발 시 정치적 고려 없이 단호히 대응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 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정현 의원** 현지 지휘관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했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마라’라고 하신 대통령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적이 도발할 때에는 군이 군사적 판단에 따라서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라 하는 지침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군은 관련 계획을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고 또 주기적으로 연습 및 훈련을 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고 또 유사시에는 단호하게 가차없이 대응해서 다시는 도발을 할 의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각오를 군은 파부침주(破釜沈舟) 또 침과대적(枕戈待敵)의 용어를 들면서 각오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도 ‘협상을 할 때 절대 방패를 내려놓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특히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이중성을 고려해서 군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도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과거 정권에서 안보 관련 한 고위 인사가, 청와대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 장성들에게 적에 대한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자세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군은 북한이 당면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려 없이 대응한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동안에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던 야당이 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5년 만에 마침내 인정을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것이다, 명백한 사실에 기초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또 야당 대표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NLL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서해평화협력지대는 서해의 평화를 유지·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NLL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그것은 NLL을 존중·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그러니까 절대 NLL 포기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합니다.

○**이정현 의원** 아니, 야당 대표께서 주장하신 서해평화협력지대가 NLL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제대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도 NLL을 존중·준수하는 입장에서 ‘안’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국방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사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 NLL을 사수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나, 국민 앞에서 다시 한 번 좀 선언하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NLL은 지난 60년 넘게 서해상에서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서 작용하고 있고 남북이 다 인정하고 있는 선입니다. 굳은 어떠한 경우라도 NLL을 확고하게 사수할 것입니다.

○**이정현 의원** 맞습니다. 영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수의 대상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 장관님,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협상 타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의 유동적인 안보 상황 또 북한의 핵미사일의 심각한 위협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러한 좋은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최근에 이란에서 핵 협상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 국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주게 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정현 의원** 북한의 내부 동향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은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핵을 보유하고 유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추가로 핵실험 할 가능성은?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은 추가로 핵실험 할 가능성을 큰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 또는 첩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현 의원** 장관님, 최근에 군내 성폭력 사례가 계속 발생해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방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최근에 저희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는 군내에 있는 모든, 특히 고급장교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또 그런 의식의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가 있고 예방시스템을 보완하는 문제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와 같은 네 가지 관점으로 내용을

다듬어서 발표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유지를 할 것입니다.

○**이정현 의원** 네 가지의 관점이 아니라 사십 가지의 관점이라도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특단, 특별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알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또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방산 비리는 더 한심합니다. 이 방산 비리와는 전쟁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는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은 대개 개인적인 일탈 또 업체의 부당 이득 추구 그리고 우리 방사청을 포함한 군의 사업 관리 부실, 크게 세 가지 유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또 이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문제 이런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매국적 행위이고 이적 행위이라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정현 의원** 그런 방산 비리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사실 방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익이나 이런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메리트가 적은 것이지만 국가방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방산업체든 또 중소기업 방산업체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명확하고 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50분 걸렸어요, 50분. 한 사람 질문하는 데 5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명확하고 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완주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김제·완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 8000달러, 수출액 573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약 475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1968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69달러, 수출액 4억 5000만 달러, 무역적자 10억 달러에 비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들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에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3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육칠십 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고 팔구십 년대에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최단시간에 이루어 낸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교육입국 열망과 애국심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으로 민주화도 함께 이루어 낸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올해 3만 달러를 넘고,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4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 즉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이 극에 치달아 북한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동굴에 은폐되어 타격이 어렵고 서울 전체와 수도권을 사거리에 두고 있는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공존,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 간 자유왕래와 소통 그리고 상호존중 그리고 신

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최근 현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결심하고 한 말,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최규성 의원** 유언·유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최규성 의원** 오늘 아침 언론, 경향신문 보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규성 의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성완중, 사정당할 사람이 사정…… 이완구가 사정 대상 1호’ 이 내용 다 읽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읽어 봤습니다.

○**최규성 의원** 소회가 어떻습니까, 읽어 보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 참, 글썽요. 저도 참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제 느낌이 이렇습니다. 이분에 대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에 대한 생각들은 아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이분께서 일단 메모에 또 녹음에 남겨 놓고 가신 분들이 지금 나온 걸로는 여덟 분 아닙니까? 또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덟 분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아무튼 저는 이분이 굉장히 섭섭한, 그 내용을 보니까 섭섭하고 마치 제가 사정을 계획하고 수사하고 지휘한 이런 것으로 굉장히 아주 섭섭한 마음이 녹음에 나와 있어요, 마치 제가 주도한 것처럼.

그래서 저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확인이 됐고요, 사후적이지만.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대로 사자의 말씀인데, 망인의 말씀인데 대단히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떠한 경우도 어제 말씀 올린 대로 이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답변한다면 그러한

사실은 없는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성 의원** 시저가 죽을 때 ‘브루터스 너마저도’ 했습니다. 고인 성완중 회장이 ‘이완구 너마저도’입니다, 너마저도.

‘청와대와 이완구가 째짜미해서 나 성완중이를 죽이려고 했다. 나 성완중이가 이완구 총리 되는데 추천했고 총리 청문회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많은 플래카드 붙이도록 해서 내가 이렇게 너 도와줬고 2013년도 선거 때 3000만 원 갖다 줬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지은 죄 얼마나 많으냐? 그래, 성공불 300억 용자했다 치자. 내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별건수사했지, 별건수사’ 별건수사는 기획수사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이완구 당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세 번 외치면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한 얘기가 거짓일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사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돌아가신 분이 반드시 진실을 말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분께서 저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생각을 가졌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또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준 분을 제가 무슨, 뭐하는 말로 해코지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때 도와주시고 또 돈도 갖다 주고 또 그렇게 배려가 있었다면 제가 굳이 고인을 해코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께서 이번 상황을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청와대하고 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혐의한 바도 없고 더군다나 자원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듣기로는 수사를 또 내사를 했던 것으로 듣고 있는 것인데 총리 취임한 지가, 제가 2월 17일 날입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간 지가 3월 18일인데,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건인데 본인이 아마 오해를 하셨던 것 같고, 하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 말씀

대로 플래카드도 붙이고 돈도 주고 막 이런 사실을 했다면 왜 저한테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규성 의원** 매달렸죠.

○**국무총리 이완구**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3월 22일 날하고 돌아가신 날짜하고 너무 길지요.

○**최규성 의원** 아니, 육성 녹음에 3000만 원 직접 받았다고 하는데 고 성완중 회장이 이완구 총리한테, 같은 동향이고 그런데 무슨 원한이 저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 유서·유언,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최규성 의원** 그리고 허태열한테는 7억 줬다고 했지만 이완구 총리는 3000만 원밖에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그것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최규성 의원** 2013년 선거 때 가서,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사실 없고요……

○**최규성 의원** 자, 그러면 그런 사실 없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규성 의원** 그러면 왜 태안 부의장한테 열다섯 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네 번인가 통화가 됐다고 그랬지요? 상식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게 전화 걸 수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최규성 의원** 그렇게 걸 수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왜냐하면……

의원님, 의원님 당사자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데 의원님이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보도로 접하면 당연히 그것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규성 의원** 알아봐도 한 번 걸고……

○**국무총리 이완구** 아, 세 번 정도까지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통화한 것은 세 번인가 네 번 통화했는데 나머지는 통화가 안 된, 신호가 간 걸 통틀어서……

○**최규성 의원** 그래서 다른 전화로 다시 전화 걸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다른 전화……

○**최규성 의원** 같은 전화로 건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같은 전화입니다.

○**최규성 의원** 한 전화기로 열다섯 번을 건 거예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전화기를 하나만 쓰고 있으니까요, 물론 다른 전화기가, 제 집사람 전화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규성 의원** (웃음)

집사람 전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전화기가 2대입니다.

○**최규성 의원** 2대예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2대인데 분명히 얘기할게요.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전화기가 2대인데 제가 다른 전화기 할 이유도 없고……

○**최규성 의원** 그러면 2대를 교대로 걸었구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제가 전화 한 게 하나 있고, 그것은 제 수행비서나 총리실에 있는 사람과, 기사와 쓰는 전화고 하나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 전화기를 보면 아시지요.

○**최규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단 한 폰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 한 번 물어보고 혹시 또 질문할 게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은 모르지만 세 번 네 번 전화 거는……

단 한 폰도 안 받았고 죄 진 것이 없는데, 한 번 정도 물어볼 수는 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어제……

○**최규성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 물어보는 것은 뭔가 풀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어제 제가 모……

○**최규성 의원** 3000만 원 받은 것 나왔느냐고 그것 물어보지 않았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아닙니다.

○**최규성 의원** 그러면 뭐 물어봤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최규성 의원** 물어본 내용이 뭐냐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왜, ‘이완구를, 이완구를……’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첫째요.

두 번째,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없었는가?

세 번째, 애도하고 장례 잘 치렀는지, 제가 못 내려가니 제 비서실장이나 다른 사람 보낼 테니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왜냐하면 그 의장과는 대단히 가까운 분이예요.

○**최규성 의원** 자, 그것은 첫 번째 전화고요, 두 번째 전화 걸어서 또 뭐 물어봤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최규성 의원** 같은 얘기를 네 번 합니까, 전화 걸어 가지고?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시지요.

의장님한테 여쭙 보면 아시는데 어제 모 종편에서 의장님의 인터뷰를 봤어요. 잠깐 제가 들은 것인데 어제 모 종편에 방영된 겁니다. 의장님께서 ‘이완구 총리에게 전화가 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물어봐서……’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제 바로 MBN의 8시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말이 어제 종편에 나오고 있었으니까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협박 아니예요, 협박?」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순수하다는 얘기는 그분 입으로 나오니까. 태안군 의장님 말씀이 육성으로 ‘이완구 총리가 순수하게 얘기를 했는데’라고 하는 부분이 어제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풀 텍스트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성 의원** 고인의 육성 진술이 나온 이상 총리직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한 분이 근거 없이 한 말씀을 듣고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퇴라는 문제를 입에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막중한 자리에서……

○**최규성 의원** 근거 없이, 고인이 거짓말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사자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이 저한테 상당히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고인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성 의원** 총리는 대검 수사보고를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일일이 보고받는 자리에 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지 않습니다.

○**최규성 의원** 받을 수 있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법무부장관한테 보고를 요청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최규성 의원** 수사상황을 청한테 보고듣는 구조 이렇게 해 가지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총리가 있습니다, 총리가. 법무부장관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가 각부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총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최규성 의원** 총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저는 전연 관련이 없으니까요.

○**최규성 의원** 총리께서도 경찰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 했습니다.

○**최규성 의원** 수사할 때 위의 상관들 데려다가 수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최규성 의원** 그게 진실이에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든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전·현직 비서실장 등 권력 실세, 총리 이런 분들이 다 관여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어떠한 경우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특정인들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인들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보면 자원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본인은 대단히 섭섭했던 게 녹취에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자의 말씀이라도 대단히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치 조사 다 해야 돼, 10년 치」 하는 의원 있음)

○**최규성 의원** 그래요. 다 합시다. 다 하자고요.

그 대신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 총리나 비서실장, 실세들 검찰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 검찰 인사 누가 하는데요? 검찰이 인사가 생명입니다. 자기 수사 끝나고 나면 자리배치하는 것 다 위의 실세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실제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 특검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수사 철저히 하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성 의원** 한반도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전쟁 발발 위험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규성 의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 사정거리가 안양까지이고 그리고 20분이면 동굴에서 나왔다 들어간다는 것,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규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장사정포는 우리가 타격해서 궤멸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수도권 이천만 국민이 사정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 5·24 조치 왜 생겼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우리 정부의 조치입니다.

○**최규성 의원** 천안함, 북한이 침몰시켰다. 인정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아직까지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런데 왜 같이 공동조사를 안 하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북한이 지금 옹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규성 의원** NLL은 남북 간 합의된 경계선

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것은 아까 국방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습시다라는 그것은 합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60년대부터 이미 우리 영토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상경계선으로요.

○**최규성 의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보더라도 북한은 NLL이 상호경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현재 설정된 NLL은 우리 영토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성 의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장이지 북한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북한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 영토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규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연평도 인근은 언제든지 분쟁이 가능한 지역이라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전쟁 발발의 단초가 되는 지역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성 의원** 그래서 서해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북한의 여러 가지 평화적인 조치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NLL의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최규성 의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만 불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전쟁이 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북한 장사정포는 사정거리가 안양까지입니다. 불과 3시간만 폭격을 해도 서울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분 안에 동굴에서 나왔다 들어가기 때문에 타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안 나야 되는데 이 NLL 인근이 상호 인정하지 않는 경계선이예요. 그래서 이곳이 분쟁지역이 되고 전쟁이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화지대로 남북 간에 합의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성 의원**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선 사과 후 조치를 주장하는데 역지사지해 보면 5·24 조치 해제는 대북관계의 긴장완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북한이 5·24 조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다섯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마는 통행을 한다면 투자한다면 방북이 안 된다면 인도적 지원 문제라면 기타 여러 가지 항해금지라면 이런 것들이 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성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성 의원** 정부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이 개미 쳇바퀴 도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천안함 폭침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이고 정부는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그러면 긴장과 대립으로 계속 가고 전쟁의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3만 불의 시대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데 왜 전쟁 위험을 안고, 폭탄을 안고 갑니까? 이것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적 동의 내지는 국민의 여러 가지 정서를 생각할 때 북한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5·24 조치를 무작정 아무 조건 없이 해제하기는 대단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성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 남북 물길 소통, 하천 관리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화해·공존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수락을 하면 즉각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여러 가지 인도적이거나 실질적인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규성 의원** 금강산 관광 바로 재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 문제 또한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인한 북한의 아무런 해명과 조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신변이 완전히 보장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다면 검

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성 의원** 그것 우발적 사고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간에 진지한 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성 의원** 사과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재개하는 것이 저는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이 전제조건에는 우리 국민의 완벽한 신변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성 의원** 개성공단 활기 잃은 지 오래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규성 의원** 개성공단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의 전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최규성 의원** 그런데 개성공단의 제품이 미국에 제대로 수출이 안 되지요? 한미 FTA, 다른 FTA 하면서 개성공단 제품 수출,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베트남은 개성공단 제품이 원산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인정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러니까 미국하고 EU하고 안 됐는데 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열심히 해서 의원님 말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지금 북한 주민들 식량 부족으로, 의약품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규성 의원** 노무현 정부 때 쌀 40만t씩 매년 대북 지원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최규성 의원** 북한이 식량난으로 어려울 때 이명박 정부 때 옥수수 5만t을 북한에 보내 준다고 했더니 자존심 강한 북한이 소, 돼지나 먹는 것

안 먹겠다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규성 의원** 그렇게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대북 쌀 지원이 전부 중단됐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에? 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됐느냐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까 말씀 올린 대로 5·24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겠다고 하신 만큼 하루빨리 대북 쌀 지원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대통령의 의견을 총리께서 받아들여야 되지요.

쌀 얘기 나온 김에 쌀값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쌀값, 이명박 정부 때 4만 6000원씩 사 가지고 2만 4500원씩 판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다소 좀 떨어진 가격으로 수매한 적은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정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창고보관료를 합한 하한가로 공매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규성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24만t을 더 사기로 했는데 18만t만 사고 6만t은 시장 격리 안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규성 의원** 그것 바로 사도록 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다음에 남북철도, 한반도 중반 철도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구체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일부나 또 관련 부처에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북한이 철도 연결을 제안하면 즉각 동의할 용의가 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규성 의원 그다음에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철도사업 중에 KTX, 오송으로 돌아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19km?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규성 의원 그것 요금 안 받기로 했는데 왜 이 정부에서 받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예, 그것 살펴보고……

○국무총리 이완구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노무현 정부 때 약속이지만 정부가 국민한테 한 약속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알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것 아주 호남에서 분개하고 있어요. 그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19km 요금 빼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완구 19km 요금을 빼 달라는……

○최규성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요금을 빼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최규성 의원 예, 안 받기로 했습니다. 천안에서 오송으로 돌아가면서……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19km는 요금을 안 받기로 약속한 건데 지금 정부에서 받으니까 그것을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규성 의원 그다음에 KTX가 서대전으로 돌아가는 게 익산까지만 가고 그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김제나 장성-광주가 KTX가 없습니다. 이 길을 연장 운행할 용의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다음에 철도교량 관련해서 제가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철도교량에 대한 법안을 제출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된 뒤에 국토부가 아무리 시행령을 만들려고 해도 기재부가 반대해 가지고 4년간 시행령을 못 만들고 있어요. 지방재정으로 돈 쓰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 총리가 조정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살펴보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조정해서 국민이 안전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방부장관 잠깐 나오십시오.

전주 206항공대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 상황이 발생할 시 일반적으로 사단병력이 항공대대로 이전합니까, 항공대대 헬리콥터가 사단으로 갑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헬기가 작전병력이 있는 곳에 이동해서 작전병력을 탑승시키고 작전을 합니다.

○최규성 의원 그러면 35사단 안에도 헬기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206항공대는 후방지역 작전을 위해서 서남부지역에 하나 또 동쪽에도 대대가 하나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지역에 있는 부대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간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규성 의원 그러니까 35사단과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반드시 같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최규성 의원 그러니까 전라남북도나 충남 아무 데나 있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시공간적으로 중앙에 현재도 위치해 있고 앞으로 그런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규성 의원 전라남북도나 충남 아무 곳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 것이지요? 작전구역 내에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작전구역 내에 가급적 시공간상 중앙지역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규성 의원 그러니까 충남북, 전남북 합해서 가능한 한 중앙에 있는 게 좋겠냐?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최규성 의원 알았습니다.

전시작전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한다' 원칙에 합의했어요. 이에 2월에 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2012년 4월 17일에서 15년 12월 1일로 조정 합의했어요.

그런데 장관, 전작권 환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2014년 10월에서 2020년 중반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무기한 연기한 이유가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심각한 상황과 또 우리 군의 그러한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0년대 중반에 우리들의 그러한 능력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한 것입니다.

○최규성 의원 주권국가가 되나 안 되나는 전작권이 있나 없나입니다. 대한민국 장군들은 대체 어느 나라 장군들인데 전작권 준다고 해도 마다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통수기구의 지시와……

○최규성 의원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 합참의장의 지침에 따라서 공동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규성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나라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대한민국 군인은?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국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한미 양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받아서 전시에 작전권을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된 체제입니다. 우리 군은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 아무튼 부끄러운 줄 아시고 하루 빨리 전작권 가져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최규성 의원 올해는 광복 70주년의 해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아픔의 분단 70주년이기도 합니다. 또한 6·15 공동선언이 15주년 되는 해입니다.

민족 분단과 대립·갈등, 전쟁 위협은 우리 경제는 물론 남북 공멸의 길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통일은 민족 번영의 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아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레스덴선언 등 통일구상을 내놓았지만 아직까

지 이렇다 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공영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과 6·15,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는 것만이 교착되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유일한 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길이자 경제 발전의 초석입니다.

첫 출발은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이며, 5·24 조치의 해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최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병 출신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팔달구·서둔동·탑동 출신의 김용남 의원입니다.

국방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산 비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방산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서 방산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런데 방산 비리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평가를 넘어서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방위사업청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김용남 의원 방위사업청이 신설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전까지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비리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소요기획부터 획득, 평가에 이르기까지 견제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조직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김용남 의원 그런데 과거에는 울곡사업 비리

나 경전투 헬기사업 비리와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최고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권력형 비리가 주로 방산 비리의 형태였다면 오히려 2006년도 방위사업청이 신설된 이후에 벌어지는 형태를 보면 시험평가서 조작 또는 군사기밀 유출과 같이 실무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권한형 비리, 권력형 비리가 권한형 비리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방산 비리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세간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통영함 비리사건, 장관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용남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전직 해군참모총장까지, 물론 소장으로서 방위사업청의 부장으로 근무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만 전직 해군참모총장까지 연루된 사건입니다.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는 2억 원짜리를 무려 41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견제장치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방산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방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비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수요자인 군과 생산자인 방위사업체 간의 쌍방 독점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정보의 접근권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리 발생 소지가 많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동안 국방부에서 방산 비리에 대한 대처가 안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위사업청에 기무사 요원들이 상주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런데 그 방위사업청에 상주하는 기무사 요원들이 대부분 퇴직을 앞둔, 소위 일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지적이 있어서 최근에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기무사팀에 대해서 인원도 늘리고 거기 상주하는 인원들의 자질도 좋은, 군대생활을 더 많이 할 여유가 있는 그런

요원들로 대체했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전까지는 주로 퇴직을 앞둔 기무사 요원들이 방위사업청에 상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방산 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과 열성적인 업무 집행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국방부의 대처가 좀 안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의 구조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던 통영함이 정작 세월호 참사 때에는 출동도 못 하고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쓰고 있는 국방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은 발표하기로 북한 예산의 약 15.9% 정도를 국방비로 쓴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달러화로 계산하면 약 10억 불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북한이 발표하는 예산 외에 은닉하고 있는 예산, 제2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을 치면, 그리고 북한의 예산을 구매력지수라고 하는 그러한 기법을 동원해서 판단하면 약 100억 불 상회하는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안팎입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인건비나 연구개발비가 빠진 수치이기 때문에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요?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35조 4760억 원입니다.

○**김용남 의원** 그러면 북한의 국방비는 10조라고 따져도 지금 3.5배가 넘는 돈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한 3분의 1 정도……

○**김용남 의원**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을 제외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를 기준으로 한 전투력의 비율을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투력의 상대적 비교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전력지수로 비교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인데……

○**김용남 의원** 대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략 보면 지상군은 북한 지상군의 약 80%, 그다음에 해·공군은 북한 해·공군을 능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러니까 육군의 경우에는 대략 통설이 지금 북한군의 80% 전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용남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국방비는 어림잡아도 4배 정도, 뭐 북한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3배를 훨씬 넘는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산 비리로 인해서 돈이 줄 줄 새면서 이것이 전투력에 연결이 되지 않고 돈만 낭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방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런데 방산 비리는 구조적으로 현역이 연결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결정 단계도 그렇고 기밀이 보관되는 곳도 바로 현역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 구속되었던 5명의 현역 장교 중 4명이 구속적부심과 보석으로 중간에 석방됐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군사법원에서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이첩되어 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군판사들이 보석을 허가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 실행을 선고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연루돼서 구속되어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던 17명은 단 한 명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서 석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물론 보석과 적부심으로 4명이 석방된 이후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여론의 질타 이후에 군사법원에서 그중 2명을 실행을 선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론의 지적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보석으로 또는 적부심으로 신병을 내 주면 진술을 짜 맞추기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거를 은폐할 시도를 할 수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이 제대로 된 법리 판

단을 못 하고 중간에 석방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그 보석 허가가 난 후에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유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군판사들이 나름대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과 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양형의 차이랄까 또 그런 구속적부의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판사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이유야 어떻든 적어도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판단이 매우 달랐다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적부심사, 보석 단계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군판사들의 판단을 일단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더 좋을 걸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런데 군사법원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사법원은 부대장인 관할관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관할관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법원이나 검찰은 도제식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경험이 많은 부장들이 일일이 소위 침삭지도를 하듯이 신입 판사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경력이 쌓이면 이제 독립돼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데 군사법원에서는 지도를 할 만한 역량을 갖춘 선임 군판사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 또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아시겠지만 지금 군판사, 법무장교, 군검찰관, 법무참모 이런 것이 거의 순환보직으로 법무병과에서 돌아가면서 보직을 맡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기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순환해서 보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래서 군법무관으로 법무병과에 10년 이상을 재직하더라도 실제로 군판사로 재직하는 기간은 1, 2년 내지는 길어야 2, 3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군판사에 재직 중이더라도 다음 인사 때는 군사법원을 떠나서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통상의 예이

고 그래서 군판사들이 전문성을 키울 만한 기회가 없는 것이 실태입니다.

법무병과에서는 군판사는 잠깐 거쳐가는 보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군판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점은 실제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법원의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은 작년 기준으로 4.8%입니다. 그런데 고등군사법원에서 대법원에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된 것은 그 2배가 넘는 11%입니다.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양형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만 봅니다. 그런데 2배 이상 파기환송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군사법원의 독립성 또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런데 실제로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중에 균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 소위 순정군사범은 몇 % 안 됩니다. 대부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인데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군인도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을 가거나 민간법원 가사부를 찾아가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리고 군인도 자기가 벌려 준 돈 받기 위해서는 민간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런데 왜 유독 형사재판만은 부대 내에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꼭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서 군에 존치시키는 이유가 군기·군법 및 질서 유지 그리고 지휘권의 확립,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는 균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남 의원** 대한민국 군대가 지휘관이 지휘

권을 갖고 있고 징계권도 있고 명령권도 갖고 있는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지휘관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으면 지휘가 안 될 정도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군사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서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전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전·평시 임무 수행의 연계성이라든지 준비태세의 체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군사법원을 평시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남 의원**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도 작년에 군사법원을 포함해서 거기는 군검찰까지 폐지를 하고 다 민간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2013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그리고 전이나 계엄하에는 어차피 전시관계 법령에 의해서 편제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때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계엄하에서도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민간법원하의 특수법원으로서, 민간 판사로 이루어지는 특수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지방법원에 군사재판 전담부를 설치하더라도 전시에는 그것이 부대를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이라는 것은 전시하에도 오늘 구속해 갖고 바로 내일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 수사기관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전시에도 군사재판, 전시를 대비해서 평시까지 군사법원을 꼭 군대 내에, 부대 내에 두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제도개선도 생각할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군이 처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안보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군사법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10년도 훨씬 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현역

장병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방력이나 전투력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군사법원 폐지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신중히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최근에 가입을 결정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님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앞서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까지 가입을 선언한 국가가 53개국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김용남 의원** 무엇보다도 지분을 확보가 가장 큰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대략 몇 %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우리 기재부가 더 정확한 보고를 드려야 될 위치에 있겠습니다라는 대체로 기준이 GDP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맞는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봐 주시는 것과 같이 GDP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대략 4~5%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 GDP보다도 무역 규모 등을 포함시켜서 적어도 한 7% 정도는 우리가 지분율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장관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이것은 자본의 문제, 돈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지금 경직된 남북 관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이것을 제3의 기구로 이용해서 뚫고 나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그 의견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AIIB에 북한이 참여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라는 그러나 AIIB가 출범할 경우에 하나의 수혜 대상국으로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

수요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이라고 이런 걸 감안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남 의원** 그래서 지금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정문의 협상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김용남 의원** 비가입국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협정문의 내용에 포함돼야 북한이 가입을 못 하더라도 소위 북한의 인프라를, 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서 그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표결절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앞으로 참여 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기재부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 열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이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이 출범하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주창했던 소위 동북아개발은행의 출범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못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라는 이번에 AIIB가 출범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하나의 자극이 돼서, 또 그런 동북아 지역의 특수한 개발은행의 필요성이 논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앞으로 관계국들과 어떤 협의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용남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단순히 기재부 쪽에 맡겨 놓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이 기구를 통해서 통일 전에 북한의 인프라를 개발해 놓음으로써 오히려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고도의 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어두운 이

면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편적인 의혹 제기에도 불법이나 부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사회적 습관이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밝혀진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단하고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부족한 증거가 드러날 때에는 액면 그대로 무고함을 인정해 주는 사회적 인식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대정부질문, 이를 반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건설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제가 봐도 김용남 의원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김용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될 예정이니까 양당 원내대표부에서는 원내대표들이 본회의장에 빨리 좀 나와서 속개가 정시에 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대문갑 출신 안규백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정의라는 대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일·외교·안보 질문에 앞서 어제 총리 답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오전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2년도 대선 때 ‘투병 중이라 선거에 관여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가 오후에 ‘유세장에는 한두 번 간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총리가 새누리당 충남 명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박근혜 후보와 함께 동행 유세한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총리께서 투병 중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천안 병천 유세 때 같이 이렇게 연설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병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규백 의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때 정확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안규백 의원** 2013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성완중 전 의원이 3000만 원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사무실에서 직접 만났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만났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까 마는 선거전이 시작이 되면 누가 오고 갔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다녀가셨는데 뚜렷이 성완중 의원께서 다녀가신 것을 기억을 못 합니다.

**○안규백 의원** 성완중 전 의원이 인터뷰에서 ‘개혁을 하고 사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정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사정 대상이 사정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 이완구가 사정 대상 1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총리 이 말의 진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돌아가신 분께서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전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40년 공직생활 동안에 한 번도 금품과 관련돼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안규백 의원** 법원에, 법의 금언에 ‘사실만이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말씀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고인의 메모에 적힌 총리 이름 석 자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총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총리께서 혹시

라도 거짓말 답변을 늘어놓는다면 성완중 리스트에 대한 총리의 해명도 아마 신뢰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총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녹취된 부분을 보면 고인께서는 ‘인간적인 관계는 신뢰의 관계로 그렇게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생각과 달리 살아 왔습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는 원칙과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국가 경영 영역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규백 의원** 저는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언급하신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은 그 시작과 끝이 성완중 리스트에 있음을 저는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최근 동북아 정세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말이지요, 윤병세 외교부장관께서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리 외교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말씀은 축복이라는 그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우회적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안규백 의원** 그것은, 그 정치적 수사하고 기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인식과 달리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 상황을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좌측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난 3월 22일 자 뉴욕타임스 만평입니다. 미·중 사이에 꿈쩍없이 갇힌 우리 처지를 지금 빗댄 것입니다.

또 우측 그림은 1905년 미국 시사잡지 하퍼스 위클리가 러·일 사이에 묶인 대한제국의 운명을 풍자한 만평입니다.

저는 ‘지금 110년 전 한반도의 모습이 지금과

무엇이 차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외교부장관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다 비상한 각오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의원** 본 의원은 이 두 만평이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의 시각에서 봤다는 겁니다. 이래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쎄, 그 축복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의연하게 국제적 관계를 잘 고려해서 헤쳐 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활로도 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안규백 의원** 저는 이 외교부장관의 발언이야말로 굉장히 경박하고 낮은 수준의 발언이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지정학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구한말에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이 한반도가 만약에 주변의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략과 전술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박근혜정부는 말뿐인 대북전략, 전략 없는 외교·안보 정책, 다시 한 번 한반도를 열강의 싸움터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현재 우리 한반도 상황을 우리 중심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비전과 포괄적 전략이 저는 없다는 겁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이런 급급한 현상입니다.

예컨대 중국발 AIB 가입은 미국의 눈치 속에 사실상 막차를 탄 겁니다, 외교부장관이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발 사드 문제 어떻습니까? 국민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정부는 모르쇠로 하고 있고 나와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정부의 외교 실태 아닙니까?

총리, 이게 외교·안보의 전략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국익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아주 간략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전략성 모호성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선택을 강요받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 모호성은 그야말로 저는 허울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도발,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일본이 말이지요, 독도 발언할 때마다 외교부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총리!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안규백 의원 어떤 말씀 했습니까, 외교부는?

○국무총리 이완구 일본의 역사?

○안규백 의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올바른 역사적 인식하에 일본의 역사적 퇴행은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지금 그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는데요. 독도에 대해서 도발을 할 때마다 그저 단지 할 수 있는 얘기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그런 미온적 태도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일본의 그런 말 때문에 계속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마침내는 중학교 교과서까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만약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 총리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 문제는 15대, 제가 96년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단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조용한 외교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두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이 문제를 일본이 좀 복잡하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끌고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대처를 취해 왔습니다.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우리 정부에서는 판에 박힌 대변인 논평과 기껏 한다는 게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수준의 이런 수준까지뿐이 못 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그런 또 세심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다마는 현재 보류 중인 독도 입도시설에 대해서 당장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입도시설 문제는 작년에 추진했다가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생태라든가 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잠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마는 이 문제 또한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독도 입도시설을 당장 추진하십시오.

과거 식민지 지배 때 일본이 우리 궁궐을, 창경궁인 궁궐을 동물원으로, 창경원으로 바꾼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시키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른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한테 우리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저는 입도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근자에 사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작전 중심이 짧고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측면과 반면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잡는 요술지팡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쪽 견해에 대해서 장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한국적 특성을 감안해서 KAMD라고 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통상적인 미사일방어체계의 한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여러 수단의 하나지요? 지금 사드의 정확한 제원…… 기술적 검증, 군사적 효용성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까지 사드는 미국이 십수 년에 걸쳐서 개발을 해서 4기를 생산해서 판매 하나 또 미 본토에 하나 배치를 하고, 2기는 예비로 보유하고 있고 13번에 걸친 요격시험을 통해서 다 성공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성공했다는 게 검증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60%만이 성공을 못 했다고 이미 밝혀지 않았습니까? 60% 정도밖에 성공을 못 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요격시험을 한 것은 다 성공을 했다, 다만 요격시험의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대신 우리 군은 조금 전에 장관께서 언급했다시피 한반도의 전장과 작전환경을 고려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즉 KAMD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록강부터 한반도 남쪽 도서까지 우리 한반도는 약 1000km라는 짧은 중심작전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군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탄도탄 미사일을 쏘면 사거리가 짧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개 저희들이 사거리 300~500……

**○안규백 의원**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리고 1000km에 이르는 스커드나 노동 1300km 이렇게……

**○안규백 의원** 그 범위 내에서 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는 사거리가 약 1000km 이상 되는 대포동이나 KN-08을 대비한 무기체계인데, 따라서 한반도 중심거리와 사드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는 적 미사일의 종말 단계에 해당하는, 종말단계 상층 방어를 위한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거리가 30~225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 그것은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현재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을 북한이 몇 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스커드와 노동을 합치면 한 800기 내외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규백 의원** 약 800~1000기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안규백 의원** 만약에 북한군이 전쟁을 감행한다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그 무수한 장사정포와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동시다발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은 한미 연합전력으로 대화력전 또는 적의 주요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 이런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그렇다면 북한이 70대의 동시 수단으로, 발사 수단으로 동시에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사드가 있다면 이를 다 막을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1개 포대는 50개의 표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그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사드가 있다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을 수는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미사일도 전체적으로 아까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한 800~1000여 발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동시에 1000발이 사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드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완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 아니지요. 지하동굴에서 동시에 나와 가지고 이동식 발사대를 수단으로 해 가지고 70발을 동시에 같이 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평상시부터 감시정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탐지해서 또 거의 실시간에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요격할 수 있지만,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 그것을 디펜스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세계 어느 나라든 적의 공격능력이 동시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격발이 되

면……

○**안규백 의원** 지금 국방부에서 사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사드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는 있지 않고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KAMD, 킬체인이 그러한 초기 대응능력을 상당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무기체계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장관, 이제 들어가십시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과연 우리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절한가에 대해 보다 냉철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안규백 의원** 첫째, 사드는 중심거리가 짧아서 한반도 작전환경의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전시에 북한의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이 마하 5 이상 속도로 날아와 우리 영토에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 약 5~9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드는 이를 다 막을 수 있는 천하 방패가 아닌 것입니다.

2013년도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한국은 MD의 효용성이 크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여느 의원분 중에서 북한이 사거리가 긴 장거리미사일 발사각도를 고각으로 수직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리, 지금 우리가 고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 기술이 있다고 보십니까? 검증이 됐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안규백 의원** 미사일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사일을 쏘을 때 45도 각도로 이렇게 발사돼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만약에 수직 고각으로, 60도 각도로 떨어지면 미사일이 급격히 낙하하면서 공기 중에서 저항과 마찰로, 대기권 밖으로 벗어났을 때, 이게 동체가 파손이 되고 모든 탄두에 있는 내부 장비가 타 버릴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각으로 발사시

켰을 경우에 무기 자체의 기능과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략적인 사드 무기 특성을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의 각국과 전략적 관계를 우리는 또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동북아 패권이 미·중 사이에 팽배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미·일의 남방삼각대 북·중·러의 북방삼각이 20세기처럼 신냉전체제가 도래된다면 아마 이것이 사드 때문에 이런 대결구도가 좀 더 가속화되리라고 판단하는데, 이처럼 상황이 지금 엄중합니다. 엄중한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런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쓰리 노(three no)’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고 협의가 없기 때문에 결정도 없다’ 이게 참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대단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정말로 진중한 그런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의원** 아니, 사드가 어제오늘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불과, 이게 벌써 2년 넘게 지금 상당히 미국 축하고, 미축하고 갔다 왔다, 의사가 있다 없다, 도입이다 구매다 배치다, 이렇게 상당히 장기간 지금 오고 있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하여튼 의원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사안이 됐든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규백 의원** 그래서 국익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에요, 이게 사드 한 포대에 지금, 물론 미국에서 LOA가 우리 측에 온 건 아닙니까라는 약 2조 원가량 됩니다. 2조 원가량 되는데 이 사드를 배치하면 또한 유지하는 데, 유지보수 하는 데 그 배 이상의 돈이, 예산이 지금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들 샘(M-SAM) 롱 샘(L-SAM),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탐색개발 하는데 이걸 좀 앞당겨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들 내지는 롱 샘을 포함하고 또 여러 가지 수

단을 놓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그래서 탐지·결심·타격, 킬체인을 강화시키고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전략을 더욱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드의 지대공보다는, 하늘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대지 공격미사일 현무라는 게 있습니다. 현무는 대당 가격이 20억뿐이 안 갑니다, 사드는 몇조 원 가지만. 사드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효율성이 높은 이 지대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말씀하신 킬체인, KAMD 또 지금 우리가 논란하고 있는 MD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현무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놓고 의원님 말씀을 잘 고려해서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일련의 사드와 AIBB 같은 이 문제에서 보듯이 한반도가 말이지요, 미·중 사이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이게 아마 충돌선으로 저는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저는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한반도의 핵심인 북핵 문제도 말이지요, 사실상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총리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6자회담도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해서 이게 열리는 것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 문제도 그런 각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백년 하청이겠네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북한이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국제사회에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히 6자회담을 계속 가동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역사를 회고해 보면 아이젠하워도 6·25 때 중공과 북한과 대화해서 휴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레이건도 악의 제국이라 하는 소련과 대화를 해서 동유럽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었고, 얼마 전에 오바마도 53년 만에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다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화의 자세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고견의 말씀 여러 가지로 경청해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규백 의원** 대화가 길입니다. 마음의 길이 지극한 정성에서 오듯 한반도의 길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갈등의 그늘에서 양지의 평화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안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 면적의 약 7배인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입니다.

망자의 리스트로 정치권이 수렁 속을 헤매고 있고, 또 안보는 안보대로 흔들림 없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본질에서 벗어난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고자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 한반도 전쟁 가상 시나리오를 먼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4시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영상물은 북한이 만든 ‘3일 전쟁’이라는 영상물과 유사합니다.

동영상을 보신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준비를 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전

에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을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대선 때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는 12월 7일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네장터에서 유세차에 올라서 유세를 약 7분 이상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대선 때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대선 때 중앙당의 선거를 기획하고 또 중앙당에 전혀 관련이 안 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명예’ 자리를 붙여 가지고 명예선대위를 아마 중앙당에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11월 달까지는 제가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들어서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하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세종시에 충청남도…… 그러니까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선대위 발대식에 잠시—이제 몸이 부어 있으니까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하고, 마지막 12월 18일 천안 유세장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던, 그 둘 내지 세 번 정도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제가…… 충청남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중앙당이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한 것이지 대선에 제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한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신 소감은 또 어떠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기호 의원** 동영상을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쟁이라는 게 항상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 전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잊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 봤습니다. 항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이러한 직책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의원**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려면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지만 합니다. ‘평화, 평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평화통일도 달성될 수 없고 평화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화로써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대화도 하고 또 대비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의원** 그렇지요. 반드시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대화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지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의 최대 화두는 통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 통일길을 열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여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고 이 땅 위에 통일강국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우리게 아니고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물론 적화통일 아니겠습니까?

**○한기호 의원** 적화통일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기호 의원** 인민민주주의 통일입니다.

바로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대화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은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장을 해제하고 있지 않나, 정신적인 무장 면에서 특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통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이 조국통일, 자주통일을 하고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데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기호 의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의 마지막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을 지향합니다.

**○한기호 의원** 그러면 단호해야 될 부분에 대해

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5·24 조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원한다면 5·24 조치부터 철폐하라 이렇게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의 약속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선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북한의 태도로 봐서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직까지는 북한의 태도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기호 의원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적인 무장 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 리퍼트 대사 피습 당일 노동신문에서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 민심의 반영이자 항거의 표시이고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처벌이다’ 이렇게 노동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좀 그렇습니다.

○한기호 의원 북한은 우리가 어떠한 사건만 있으면 이것을 전부 다 대남 심리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북세력들은 보스가 지시를 안 해도 인상만 쓰면 줄개들이 달려드는 식으로 북한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북세력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정부는 중북세력에 대한 입장을 단호하게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기호 의원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을 폄훼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전단이 우리 도심지역에 뿌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국세력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외부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국내에 뿌려지는 전단도 통제 못 하면서 북한에 보내지는 전단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서도 또 그런 가운데서도 주민의 신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남남갈등 문제 같은 것도 다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의원 또 역사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

다.

4·3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다녀오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기호 의원 4·3 사건은 현대사에서 아주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4·3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지금 일부 왜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지금 그곳에 안치된 위패에서 53명이 잘못됐다고 다시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또 4·3평화기념관에서 전시된 홍보물에 대해서도 편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부를 제가 찍어 온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처럼 4·3평화기념관 전시물도 역시 좌익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 대통령이 움직인 사실을 마치 학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북한에서 5·18에 대해서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4·3 사건에 대해서도 1983년도부터 평양시 보고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후 10년 주기로 계속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 4·3 기념 행사를 하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의원 북한이 작년도 4월 3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애국적인 반미 반파쇼 인민항쟁인바 침략군을 남한 땅에서 내쫓기 위한 반미 결사항전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이 4·3 사건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란은 반란으로, 희생은 희생으로, 애국은 애국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의 희생자 유족들도 재심의를 빨리 이루어져서 국가가 정당하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 다음은 탈북자입니다. 지금 탈북자가 약 3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탈북자들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탈북자는 기본적으로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통일부 또 기타 관련 부처에서 다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탈북자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국민이면 국민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탈북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북한 5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통일이 되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5도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탈북자들에 대한 명단을 남북하나재단에서 이북5도청에 반드시 통보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 또 이북5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이 몇 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사람들은 수시로 행정구역역을 바꾸기 때문에…… 저희와 유사한 정도의 규모로, 숫자로 행정구역역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우리가 5도청으로 보고 있는데 2배가 넘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군사적으로 북한의 실지형을 다 쓰고 있습니다. 행정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북한의 5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남의 나라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이북5도청도 바꿔야 됩니다.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왜 안 바꾸십니까?

또 북한에서 탈북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병역을 지금 희망에 의해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 가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탈북자 중에서요?

○**한기호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그게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한기호 의원** 유일하게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요구하기를 왜 우리는 정당한 국민으로 대우해 주지 않느냐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도 정당하게 우리의 병역 의무를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한기호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님!

오늘 오전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일부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여정부 국방비는 높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비는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0년도와 11년도에는 정부재정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인 2014년하고 15년 역시 정부재정 증가율보다 국방비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국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정부가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다른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호 의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알겠습니다.

○**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합의하에서 공존하는 것은 이것이 통일이 아닙니다. 또 합의해서 통일을 이룬 나라도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통일을 이룬 나라의 공통점은 흡수통일이었습니다. 흡수통일의 반대말은 평화통일이 아닙니다. 흡수통일의 반대말은 대등통일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에 따른 1국가 2체제가 바로 대등통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통일을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

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역사는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국가가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흔히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의 통일을 달성해야 됩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지 말자는 것은 바로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내주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 종북 세력들이 추구하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총 결집, 마음가짐 그리고 대비책을 완전히 갖추어서 우리의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한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를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임내현 의원**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지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로 인한 실업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서 드러난 민주주의의 후퇴, MB 정부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의 대폭적 후퇴 등 많은 사회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이지만 우선 성완중 리스트와 불법 대선 정치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함에 있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박근혜정부 최고 책임자께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이 될 겁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거짓 답

변을 하셨습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짓말이 된 셈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도운 적이 없다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거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중앙당에서 기획을 하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면서 선거운동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시도별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따…… 제가 지금 구하러 보냈는데요. 당시에 저는 머리가 다 탈모된 상태에서, 그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012년 12월 달에 세 번 정도…… 두 번은 유세장에 그냥 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부어 있는 상태, 그런 것이지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선거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

○**임내현 의원**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은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뵈는 것만 얘기하는 걸로 보는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묻기는 ‘도왔느냐?’ 했는데 그때 답은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박근혜 당시 후보와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사진이 여러 장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18일 날, 정확히 지금 기억하는 것은 선거 전날입니다. 얼굴이 부은 상태에서 단상에 한 번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요. 세종시 출정식에 제가 가서 서 있었던 기억이 나고, 한 번은……

〔7분 45초 동안 유세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12월 초순경에 병천이라는 곳에서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제 목골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임내현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오전에 투병을 하고 오후에 선거운동했다 그런 해명인데 지금 옆에서 얘기도 나와서…… 그래서 해명은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하지 않지만 지금 드러나는 일에 의하면 약간 다소 도와줬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는 거네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도와줬다고 하는 김성태 의원님의 질의의 진의는 ‘대선에 당신이 관여

가 됐다' 하는 그 말씀인데, 관여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대선에 관여해 가지고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했냐 그 말씀인데 저는, 이따 사진을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머리가 다 빠진 상태에서, 얼굴이 부은 상태에서 암 투병하는 사람이 될 했겠습니까?

○**임내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12월 달에 범정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병천에 가서 한 번, 그리고 세종시 출정식, 12월 18일에 천안에서 연단에 올라간 것이외에는 대선에 관여한 적 없습니다.

○**임내현 의원** 그러니까 연단에 올라가면 그게 관여한 거지 뭐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관여라는 것이, 그걸 관여로 생각하면……

○**임내현 의원** 국민들이 볼 때, 지금 꼭 말씀하신 건 '관여' 하면 아주 주도적으로 한 것만을 얘기하는데, 너무 변명이 길어지면 앞으로 묻고 답하는 데 오히려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명하게 하실 게요.

성완중 전 의원 사건이 벌어지자 '개인적 인연이 없다. 전혀 친하지 않았단다'라고 거리를 뒀었는데 어제 언론에서는 공개석상에서 서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는 장면이 방송됐어요. 그래서 듣기에는 그 유족들은 상당히 분개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흔히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아니냐? 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느냐?

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에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수십 년 전 계약서, 영수증까지 보관한 분이 불과 2년 전에, 그 중요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다녔고 또 자유선진당에서부터 같이 정당활동을 했던 동료 의원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참 인간적으로 서운하다는 말 안 들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2013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도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그 말씀의 의미는 성완중 국회의원과 저는 숙내를 주고받을 정도로 그런 신뢰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지……

○**임내현 의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잘 모른다고 하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잘 모른다는 말씀이……

○**임내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9일 날 이분이 사망했지요. 성완중 씨가, 4월 9일입니다. 그러면 이틀 후인 11일 오전인데, 오전도 새벽 6시 11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태안군의회 부의장이라는 사람하고 전 의장한테 각각 12차례 3차례, 합쳐서 15차례, 전화도 보좌관을 시킨 게 아니라 직접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1대가 아니고 오늘 시인하셨지만 2대인가 3대인가 되는데, 특히 이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를 끊었더니 또 다른 전화로 왔더라', 이렇게 하니까 오늘 얘기대로 어제같이 하나가 아니고 2대 이상, 하나가 넘는 전화로 직접 하신 거지요. 두 사람한테 합치면 열다섯 번이고 새벽 6시 11분부터 시작이 됐고,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정확히 답변을 드릴까요?

○**임내현 의원** 아니, 그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저는, 보통 6시 되면 신문이 총리공관에 옵니다. 6시에 이걸 보니까 중앙일보에 '이완구를, 이완구를……' 보도가 돼 있어요. 제가 놀라 가지고 누가 했나 봤더니 이용희, 태안군의회 부의장으로 있는데 제가 도지사 때 그분이 의장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 세 통화 했고, 그분도 저한테 전화했고 저도 두 통화 먼저 해 가지고 서너 통화 한 것 같은데 그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당신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총리 이름이 괜히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았나,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 모 의원하고 같이 했다', 김 모 의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김 모 의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더 이상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용희 의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아요. 제 집사람 번호로 한두 번 전화한 것 같은데, 그 후에 열몇 통이라는 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데 어제저녁에 제가 MBN 뉴스를 8시에 들어 보니까 MBN 측에서 기자를 현지에 보내 가지고 이용희 의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순수하게'라고 하는 부분에서 끊어졌어요. '처음에 이완구 총리가 전화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순수하게' 이렇게 하고 끊어져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알아보니 '순수하게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총리 이름이 자꾸 거명이 되는 것 같아서,

대정부질문에서,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자가 했다고 그래서……

어제 나온 8시 MBN 기사 내용은, 인터뷰 내용은 '순수하게'라는 말에 끊어졌습니다.

**○임내현 의원** 그런데 지금 일국의 총리가 무슨 개인하고, 통화를 한 서너 번 하셨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열다섯 차례나 자신이, 또 그 전화도 하나가 아니고 두세 개로 했다고 그러면 참…… 성완중 전 새누리당 의원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전날 뭐 통화를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임내현 의원** 아니, 이 두 사람이 고 성완중 씨하고 사망 전날 통화한 것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굉장히 궁금하셨던가 봐요. 그것을 뭐 보좌관도 시키지도 않고 본인이 아침부터 여러 번, 열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통화를 하시고……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이름을 메모에 남겨 놓고 갔는데, 아침에 딱 눈을 떠 보니 신문에 제 이름이 나와 있고 또 그 얘기한 사람이 저와 절친한 사람이니 당연히 전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임내현 의원** 그래요. 그다음에는 통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총리니까 나에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와전된 것입니다.

**○임내현 의원** 와전이 되었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오천만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니, 총리 이름이 거명되니 상세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사연인지' 그것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임내현 의원** 그러시면 지금 성완중 전 새누리당 의원이 메모를 남겼고 언론사 전화통화가 녹음된 것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임내현 의원** 이런 것은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대 조국 교수 같으면 법률을 잘 아시는 분인데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SNS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일단 법과 원칙대로 결정한다며 호언한다.", 두 번째는 "성완중이 사망하여 진술 진위 확보가 어렵고 물증이 없으며, 허태열과 김기춘은 부인한다고 밝힌다.", 세 번째 "조용해지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는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자신이 작년 7월에 첼피아 관련

해 가지고 여당 중진 의원,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금품수수 진술이 이미 검찰에 되어 있는데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두 달 동안 검찰이 반응이 없었어요. 이것이 오보다 그랬는데 결국 두 달이 지나고 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동료 의원이지만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던구먼요.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품 전달의 마지막 고리인 김광재 전 이사장이 자살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완중 리스트도 대개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잘못 볼 수가 있는데요, 법률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있게 됩니다. 형사재판 이전에 사망한 성 전 의원의 메모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대검 문서감정실에서 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자살 직전 친분이 있는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지금 녹취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원래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있고 상당히 증명력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열다섯 번 전화했다는 것도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많이 했을까 이렇게 하고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성 전 의원이 본인의 수사에 도와주지 않는 것이 서운해서 자살을 결심하면서,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해가 안 간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최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죽기 전에 하는 얘기는 대개 옳은 것…… 그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검사를 20년을 하고 군 법무관을 3년 하면서 제 경험으로는 서운하면 이런 때 자료를 제공하지요, 안 서운한 사람은 감춰 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증거능력이 있는 메모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녹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런 말씀을 어제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금품 수수자 명단에 이름과 금액이 다른 사람은 적시되었는데 내 경우에는 금액이 안 적혀 있지 않느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오늘 3000만 원을 주었다는 녹취록이 나오니까 의혹은 더욱 증폭이 됩니다만 그거

없더라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 수사경험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필요하면 자세히 적기도 하고 이름만 적기도 하고 아니면 암호식으로 누군지 몰라도 적어 뒀요, 언젠가 써 먹으려고. 그래서 오늘 녹취록까지 나온 마당에는 대단히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메모에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유독 액수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리를 하는 어느 교수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두 실세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 무언의 압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물러날 것이라고 하고 홍문종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지요.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속된 말로 감옥에 가야지요, 은퇴할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대통령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하시고 이것을 떠나서 또 총리께서도 공직 비리나 사회 전반적인 부패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공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가 된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신속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거짓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완중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받은 것으로 거명된 분들은 현 정부 1·2·3기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당무조정본부장, 조직본부장, 직능본부장 등 중책을 맡았고 현재 직책도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중진 의원 등 현직 광역시장, 도지사들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정부 여당의 핵심 공직자들이 관여된 제2의 차떼기 사건이 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창피한 일 같은데 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되지 않게 총리께서 스스로 한번 용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께서도 수사를 해 보셨고 또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나라의 총리가 근거도 없이 막연히 쓴 메모와 또는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자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음해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볼 때 이분이 남겨놓고 간 메모나 녹취를 보면 대단히 감정적이고 대단히 격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마치 본인을, 고인의 사정을 주도한 것처럼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녹취록을 봤습니다. 대단히 감정적이고 대단히 원망 섞인 이 상태에서 그 반대의 경우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겨놓고 간 메모와 이름은 대단히 어떤 객관적이고 냉정한 그런 분위기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하고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내현 의원** 사실은 말이지요, 어제 이 오늘 질의문을 작성할 때 사퇴하시라는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3000만 원 줬다는 부분에 대한 녹취록도 되고 열다섯 번 통화했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이미 좀 문건을 논조를 좀 바꾸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서운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의혹의 핵심에, 대단히 중앙에 있고 이것은 상당히 내용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로 여기서 그것을 갖고 논란을 하지 마시기로 하고요.

저는 동북아 역사 왜곡 문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준비해서 총리와 진지한 문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으로 보아서 미증유의 이런 불법 선거자금하고 대단히 의혹이 높은 한가운데 계신 분에 대해서 총리의 사퇴를 이미 제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시고, 해당되는 외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문겠습니다.

일본이 아베 정권 이후 고노담화 수정 등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하고 심지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여러 가지 왜곡된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 2차 대전 시기의 강제징용 현장을 메이지 시대 산업화 유산이라는 명목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외교부가 발 빠른 동작을 하기보다는 조금 뒤늦은 것 아니냐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부의 그러한 역사적 왜곡, 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난 2년여 동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수정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문제를 단순히 한일 간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그동안에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을 포함한 유럽 의회, 또 그다음에 각종 국제 유수 언론 등 또 학계 인사들 포함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수정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도 지일과라고 하는 어느 콜롬비아 대학 교수도 얘기를 했고요, 기고를 했고요. 또 하다못해 미국의 역사학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연명 성명과 기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의회보고서는 이러한 역사수정주의가 주변국과의 관계를 갈등 요인을 야기시킨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저희의 국제적인 공조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할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

**○임내현 의원** 제가 특히 동북아왜곡특위 야당 간사를 하고 또 최근에 워싱턴에 가서 의회 지도자들 또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양비양시론, 우리 한일 양국 역사에 대해서 저쪽을 좀 두둔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랄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우리를 이해를 많이 해 주는 분들 그 양쪽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내현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장백산, 중국 창바이산 문화 해 가지고 우리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그래서 문화 공정하는 이 문제도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교육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문화부 좀 전체적인 포괄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이를 제안하고 건의하고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런 태스크포스?

**○외교부장관 윤병세**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러한 역사 왜곡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 또 효율성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현 의원**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드레스덴선언 1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이 있을까 기대도 해 봤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들이 원했고 서독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줬던 것이 결국 합쳐져서 통일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교훈을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전쟁을 거쳤으니까 뭐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물론 통일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고, 특히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동질성을 회복해야지 통일 이후에 양쪽이 더 잘 융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내현 의원** 지난번에 워싱턴에 가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분의 말이나 얼마 전에 북한을 자주 다녀왔던 민간 전문가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 한국 실정을 잘 알고 상당히 발전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더욱 증진시킬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남북 주민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보다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내현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임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진해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해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성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완중 리스트와 세월호 1주기에 모든 눈과 귀가 쏠려 있고 이 문제로 모든 이슈가 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핵 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정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책임총리로서 중요한 국정수행과 산적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 주리라 믿었는데 성완중 리스트 때문에 안타까움이 큼니다.

지금 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국정의 방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찬 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어떤 철학.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점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경제 살림으로 국민의 살림살이를 좀 나아 가게 하면서 동시에 공직의 기강을 전제로 한 그러한 단계하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140여 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임기 내에 완성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이번 성완중 리스트 사건도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원칙과 신뢰 속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즉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 참여정부 때 있었던 두 차례의 특별사면 문제, 대선 관련 여부 등 제기된 모든 의문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고통받는 일이 있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렇지요.

2010년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렇지요. 지금 통합창원시가 그러한 부분인데요 통합창원시의 문제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회귀 문제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다소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마는 앞으로 경남도와 또 타 시군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성찬 의원** 지금 통합창원시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게 결론이 났고 또 정부가 추진하였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즉 말하면 60개의 튼튼한 기둥을 세워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멋진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기둥 하나만 딱 박고 나머지 계획은 다 취소해 버렸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1번 기둥도 뽑아내고 그 자리를 복원시키는 것이 비정상적 정상화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찬 의원** 그래서 통합창원시를 이제는 해체하고 원래 진해·마산·창원으로 되돌리는 게 순리이고 그것이 정 불가하다면 광역시로 승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일단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한번 정부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성찬 의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자작극이다, 좌초다라고 왜곡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신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러나 근거 없는 말들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인들, 또 사회 여론 주도층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금 천안함 전시관, 그런 곳을 한번 보여 준다면 이런 막말들이 없어지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이제 명백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실에 대한 놓고도 정부 발표를 불신하고 우리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편 가르기 하는 일이 없도록 함정 견학 등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에 현존하는 핵무기와 프로그램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폐기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북핵 불용으로 저희가 약칭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핵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소형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 3차 핵실험 했을 때 장관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때는 제가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인 자격이었습니다마는 당시 저희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에 관한 4개 결의안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2094호 결의안을 채택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으면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렇지요. 제가 워딩을 읽어 볼게요.

‘유엔 안보리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간 공동 공조로 강력한 억지를 하겠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한 고통스럽고 변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저희와 국제사회의 공통 전략’이라고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취임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런데 물론 하고 있겠지만 아무런 가지적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같은 문제 협상 타결도 결국은 국제사회가 경제제재 등을 통해서 강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본다면 이제 북한에게도 ‘아,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유지가 어렵겠구나. 더 이상 못 살

겠구나.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압박을 줘야 하는데 지금 가지적인 성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북한대로 마이웨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가지고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런 핵 문제는 바로 이런 국제사회의 압박과 또 끈기 있는 협상 노력이 주효했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란과 북한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압박과 대화를 같이 병진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진전은 느립니다마는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중에 5자,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에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 특히 소형화·경량화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탐색적인 대화를 갖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인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압박과 더불어서 이러한 협상 노력도 다시 한 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좀 더 강력한 압박 또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시간은 결국은 우리 편이 아니고 북한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념하시고 결국 시간만 가면 북핵 문제 해결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지금이 내일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생각이나 장관님 생각이 뭐 똑같으리라 봅니다. 중대한 우리에 대한 도발이고 진실을 조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데 우리 외교부에서 기껏 하는 것이 일본 대사 불러서 항의하고 경고하고, 말로 그치는 것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겉으로 보시는 것은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주요 우방국들 또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유엔 인권이사회라든가 유엔 안보리 또 미국·유럽의 많은 의회의 결의안, 또 최근에는 미국 역사학자들이 공동결의안을 내

고 또 최근에는 지일파 인사들까지도 이런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이런 양심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성찬 의원** 복잡한 외교 문제 때문에 다 표시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망언을 할 때마다 어떤 조치를 하든지 독도에 대해서는 독도 거주 시설을 확장하든지 무언가 가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본의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마 원칙 있는, 일관된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2년 지난 시점에서 그 정책이 맞느냐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안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러한 지적이 있는 것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여튼 주요 정책 분야에서 가능한 한 성과가 나오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다양한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김성찬 의원** 북한은 스스로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 정권도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또 북한과 일본의 태도를 좀 변화시키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이제는 감을 따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 행동하는 정책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지난 3월 달에 제가 의장으로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3년 만에 개최를 해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별도로 가지면서 많은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한일 간의 외교장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벨에서 다자회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기에 대화를 나누고 또 저희의 그런 관심사,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김성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다음 달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일본 방위대신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찬 의원** 회담 의제는 무엇입니까, 한다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담 의제를 특별히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렇다면 일본 방위상이 1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한국에 제안하였고 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안한 바는 없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5월 말에 싱가포르에서 상그릴라 회의가 있고 거기에 한일 국방장관도 참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회에 그런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즉 쉽게 말해서 5월 달에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일본 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었고 독도 망언 등으로 우리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한일 국방장관 간에 이러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작금의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본다면 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리라는 믿음이 안 갑니다. 이 문제는 협정 체결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다 하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참여정부 기간 중에 북한의 도발이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기간에도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렇습니다.

2006년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스커드·노동 시험발사, 1차 핵실험 등 무수한 도발이 있었고 그

렇지만 참여정부 기간 중에 북한의 도발이 좀 뜸하다가 2009년에 대청해전,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열여덟 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도발 강도를 높였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남북 관계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찬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퍼 주고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 주면 선심 쓰는 것처럼 도발을 줄여 준다는 이런 북한의 조폭적 행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국방부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발을 한다면 그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고 가차 없이 응징해서 다시는 도발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오늘 북한 핵 미사일과 대비계획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2006년 1차, 2009년 또 2013년 이렇게 세 번에 걸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1차 실험을 하고 한 7년 이내에 소형화를 달성한 것이 통상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 경과기간을 보면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김성찬 의원** 국방부에서는 북한 핵무기를 ‘현존하는 위협이다’라고 간주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에는 심각한 위협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러니까 현존하는 위협이다, 즉 핵무기를 가졌다는 전제하에 대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핵무기를 가졌다는 전제라기보다도……

○**김성찬 의원** 아니, 핵무기를…… 말씀이 조금 애매한데, 인정하자는 게 아니고 핵무기를 가졌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니까 그러한 추정, 가정하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찬 의원** 그러면 현존하는 실제적 위협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탄에 대한 어떠한 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는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대비 그리고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전적 수준에서의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다시 말하면 탐지·교란·파괴·방어라고 하는 네 가지 개념이 작전 수준에서 구체화되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전략 자산과 여러 가지 재래식 자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또 군사적인 수단 이외에 외교·정보·경제·정치 이러한 수단들을 통합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김성찬 의원** 장관님, 정말로 하나하나한 이야기입니까.

억제, 좋은 말이지요. 우리가 억제한다고 북한이 억제되는 나라입니까? 억제 안 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하나하나한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표현은 이렇게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한미가 최근 수년 동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화된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억제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막강한 한미연합전력 또 동맹의 여러 가지 전략 자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태세는 북한이 함부로 핵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찬 의원** 그러니까 외교나 경제를 통해서 억제하는 부분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금 장관께서는 군사적인 완벽한 대비 계획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지금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한다는데 몇 년도에 완료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앞으로 10년 남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구멍 뚫린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억제전략의 차원에서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찬 의원 맞춤형 억제전략, 한번 시원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핵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 다시 말하면 핵무기만을 가지고 핵우산을 통해서 억제하는 것이고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 핵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한 상황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확장 억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재래식 전력 또 미국의 재래식 전력 또 미국의 핵을 제외한 전력 자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북한이 핵을 도발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성찬 의원 아니, 장관님 억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으로 타격하고 무력화하고 방어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많다이겁니다. 억제만 된다면 좋은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기본을 억제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에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또 혹시라도 핵을 장착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그 전에 교란하거나 파괴하거나 또는 발사된 후에 방어하는 그러한 작전적 수단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성찬 의원 지금 현재의 능력도, 우리 그림 잠깐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의 능력도 15km밖에 지금 안 됩니다.

다음 그림, 극히 일부분밖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다음, 2020년 되는, M-SAM이 개발 완료되는 때에도 겨우 15km, 20km 수준입니다.

다음, 극히 일부분,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중반 되어도…… 다음, 저게 2025년쯤 되면 전력화 양산된다고 보더라도, L-SAM이지요,

아주 극히 50km 이하 수준에서밖에 요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개발하겠다는 부분도 이제 탐색개발했지 않습니까?

탐색개발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탐색개발의 개념 자체는 작전 요구 성능대로 그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시험적으로 개발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탐색개발은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서 체계 개발로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즉 개발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도 안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L-SAM을 2025년쯤에 한다는 부분도 불확실한 계획이라 이겁니다.

그 계획을 두고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비 계획이 되었다, 한미연합방위전략으로 한다'는 부분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주한 미군사령관도 '미군 전력으로도 미군 보호하기 부족하니까 사드를 배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 안 합니까? 미군도 미군 자산으로 북한 핵 미사일 대비하는 데 구멍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나이브하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 당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가용 능력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2020년대까지 소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을, 우리의 자체적인 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요격은 우리가 소위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에 4D, 탐지·교란·파괴·방어 중에서 탐지·방어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 능력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탐지·파괴, 탐지·교란 이와 같은 개념의 공격적 수단도 그건 별도로 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찬 의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KAMD는, 그거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동영상 좀 내 보세요.

(동영상 상영)

이게 이라크전에서 PAC-3로 요격하는 부분인

데 요격이 안 되어서 그대로 탄두가 떨어집니다. 저 탄두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대로.

지금도 북한이 고속 나선형으로 성층권 진입하면 대기권에서는 그것이 그냥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PAC-3로는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드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비 태세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성을 고치고 대비를 철저히 하자라는 주장은 목살당하고 일본은 침략하지 않는다는 방심으로 국토를 유린당했던 470년 전의 그때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언제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튼튼한 안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복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성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공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충청도의 동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했던,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특위에서 오랫동안 함께 노력해 왔던 고 성완중 경남 기업 회장님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먼저 총리 나와 주시지요.

우선 총리와 저는 매우 각별한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선배에 대한 예의나 또 인간적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총리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전에 새누리당의 대책회의에서 이런 것이 결정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부터 수사하라’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총리직을 유지하느냐 또 총리직을 물러난 상황에서 수사에 임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면서 마치 총리의 결단에 달린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총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혹시 총리 혼자 이런 문제를 책임져라,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해서 총리에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치 꼬리 자르기식 같은 서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서운한 생각 없습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총리부터 수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총리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총리직은 대통령 임명으로 국회에서 인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리 이전에 저도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 정치인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명예가 있고 한 것입니다. 한 분의 근거 없는 메모 내지는 진술 한마디로 이 막중한 총리직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내각을 통할하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느낍니다.

○**박수현 의원** 어제오늘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총리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대해서 그건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총리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총리의 처신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받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완구 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총리에 오르셨습니다. 그 과정

에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해명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일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총리가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국민적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잘 씻어내고 성공한 총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공·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청문회 속에서의 의혹에 더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겹치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총리에 대해서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총리의 논리대로 그렇게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 총리가 신뢰를 잃었다면 이 문제는 총리께서 결단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런 식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정치인이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처리가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의원** 태안군의회 의원과 서너 차례 통화를 하셨다 그랬지요? 혹시 서너 차례 통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통화를 다시 시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통화는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요. 어젯밤 8시, 저도 몰랐습니다. 8시 MBN 뉴스를 보면 총리가 순수하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총리가 순수하게 전화를 해 왔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곤욕을 치르니 본인이 안타깝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순수하게’라는 말을 하고 끊어져서 그 뒷말이 무엇인가 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사 할 때 군의 의장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통화를 해서, 그분이 제 이름을 거명했다 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 신문 보자마자? 그래서 전화했던 것이고 세 통화, 네 통화 전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어른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돼 가지고, 저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낮에 생각날 때 전화하고 또 안 받고 또 생각나서 전화하고 안 받고 그게 통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수현 의원**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리가 서너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그 서너 차례도 과한 것이다 이런 것이 국민적

시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총리의 지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듣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총리가 전화를 했을 때 태안군의회 의원이 ‘총리께 답할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가서 이야기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를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얘기를 한 적 없고요. 본인이 저나 제 통화를 대단히 곤혹스러워 하는 그런 분이기, 저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김 의원이라는 분이. 이용희 의장 말고 한 분이 김 의원이라는 분인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이요, 제 느낌이.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답을 하기에 전화를 더 이상 안 했습니다, 모르는 분이기. 한 통화인가 두 통화로 끝났을 겁니다.

○**박수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그 열다섯 번의 전화 시도와 통화 중에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분들하고요?

○**박수현 의원** 예, 그 태안군의회 의원에게 통화 중에 문자 메시지로 무슨 연락을 받은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문자 메시지, 그분이 저한테……

○**박수현 의원** 그러니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분이 저한테 ‘엮하는 중이니 전화 받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지요.

○**박수현 의원** 그러니까 그 태안군의회 의원이 문자로 이렇게 총리에게 ‘지금 엮을 하는 중이니 전화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수현 의원** 전달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어쨌든 그 태안군의회……

○**국무총리 이완구** 엮하는 중이니까 엮이 끝나면 전화하라는 그런 뜻으로……

○**박수현 의원** 그 의원은 총리의 전화를 쉽게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게, 대단히 곤혹스럽게 받았고 또 그런 기초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총리께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그 문자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리라 보고요. 일단 그 사실관계만 우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하는 중이니까 전화를 받지 못한다.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겠지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박수현 의원** 어쨌든 총리께서 충청 총리로 충청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총리에 오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답하는 길은 모든 것을 정말 솔직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는 대로 국민께 보고드리고 또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총리의 처신에 합당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분의 녹취록을 보면 인간관계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 간의 신뢰관계가 그런 것 아니냐, 마치 상대와 상대 간에 덮을 한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사를 논함에 인간관계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이구요.

두 번째로 그동안 제가 도지사나 또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후원금을 1원도 이 사람한테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여 2006년도 도지사 선거 때나 2013년, 2014년 그런 관계였으면 후원금을 한 푼이라도 받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단 몇 푼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분과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하고 그런 깊은 얘기를 나눌 정도로 신뢰관계에 있지도 않고요. 또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충청권 의원이니까? 제가 성완중 의원과 인간적인 속에 있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인연이 없지 않습니까, 성완중 고인까?

○**박수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희 당 내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 중에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성완중 고인과 총리와의 관계는 송사 관계도 있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칫 두 분

사이에 금품이 수수가 됐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총리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그 기사가 딱 난 것을 보고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이렇게 생각은 안합니까? 전체적인 녹취록의 맥락을 보면 이분이 대단히 원망 섞인, 그리고 마치 제가 대한민국 사정 1호라고 하는 가당치도 않은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내사를 1년 당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내사를 당해서 그 여파로, 스트레스로 제가 종종 스트레스성 암에 걸렸다는 말씀을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96년 초선 때부터 십몇 년 동안에 살살이 삼십몇 명인가 하는 사람이 내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2010년, 11년입니다. 그런 정도로 내사를 하고 제가 국가 권익위원회 조사까지 받아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민간인 사찰 기록이지요.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 성완중 회장과 의원님 아시다시피, 같은 충청권 의원이니까 저도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도대체가 연이 없지 않습니까? 합당을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제가 들어와 보니 같은당이 됐다는 것 외에는 연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금전거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푼의 후원금이라도 받았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겠는데 2013·2014·2006년 한 푼의 후원금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어찌 이분과 돈거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수현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은 그렇게 총리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다만 그런 총리의 말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 총리께서 지난 대선 때 지원유세를 다니셨는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하셔서 안 했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말씀은 지금 결국은 이 돈 얘기가 대선 때 돈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정도의 정치적 비중이 있었다면 저는 중앙당에서 활동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당 선대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충청권, 그것도 ‘명예’ 자리를 붙여 가지고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의미는 사실상 선거활동을 제가 몸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도에는 제가 몸이 부어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활동 못 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병천인가 어디에 가서 몇 번 유세해 주고 그 나머지는 유세장에 가서 서있기만 한 게 사실인데 그것으로 12년 대선에 관여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지요.

○박수현 의원 어쨌든 어제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 ‘유세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총리는 ‘유세장에 한두 번 간 적은 있으나 유세는 못 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완구 대선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 아닙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유세장에 한두 번 간 적은 있으나 유세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유세’라는 표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박수현 의원 하여튼 그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저는 ‘대선 할 때, 2012년 대선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수현 의원 그러니까 총리처럼 정확하고 그러한 분이 어떤 답변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게 되니까 국민이 신뢰를 안 하는 것이고, 총리가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그 말도 신뢰를 안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

는 준비된 외교와 통일에 있습니다. ‘통일이 대박이다’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명제가 통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민족통일은 세계 속의 한반도 시대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존을 위한 외교와 성공을 위한 통일대박 이것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준비와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외교부장관 나와 주세요.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고 한일 양국이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원년이다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박수현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미국의 암묵적 동조나 묵인을 등에 업고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광해군을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박수현 의원 조선시대 광해군은 명·청 교체기에서 명나라에 끝까지 사대외교를 해야 된다는 세력과 그다음에 신홍강국인 청나라에 대해서도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는 세력들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균형외교를 한 군주로,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이 한일 문제에 관해서 이상하리만큼 최근에 일본 편을 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G2시대의 부상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균형외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현상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대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시점은 냉전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저도 수없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제 취임사에서도 그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 요인 못지않게 외부적인 요

인 일중 관계 또 미중 관계, 미러 관계, 한일 관계도 포함됩니다마는 또 북한문제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긴장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일 관계가 진보정부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난 정부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년간 특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와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문제라든가 또 문화교류라든가 또 이해를 공유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한다 하는 이원적인 분리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장관이 지난번 3월 30일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변함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하나의 담론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재외공관장들한테 자신감을 갖고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한 반도라는 위치가 과거에는 하나의 저주처럼 커다란 약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남방 대양으로 나아가는 장점과 북방 유라 지역으로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국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수현 의원 진정한 자신감은 실력이 있을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장관의 말씀이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한 냉철한 현실 인식 위에 외교정책에 대한 미래비전을 확실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외교전략이라는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개선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과거에 중동과 남아시아에 치중했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시아를 그 못지않게 중시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략 자산 또 경제자산, 외교자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외교전략이 우리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로서는 미국의 전방 배치, 특히 이런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해하고 또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재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일본 쪽으로 균형의 추가 더 기울어지는 그런 결과로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이 지난 2년 동안 저희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평화·안보의 린치핀(linchpin)—연결고리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초석—코너스톤(cornerstone)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정도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호주는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의원 우리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가쓰라-태프트 조약이라는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고종 황제께서 세계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 등을 파견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항거하고자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미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서로 확약한 사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국익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역시 미국의 선택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편을 더 들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시기의 교훈이 말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이 국내 일각에서 한미동맹 관계와 미일동맹 관계를 일종의 제로섬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한미동맹 관계와 한중 관계를 역시 제로섬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관계들을 다 조화롭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걱정스럽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차관 발언을 보면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본의 과거사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4월 7일 날 일본을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아베 총리의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했고, 8일 일본을 방문한 카터 미국 국무부장관마저도 “과거의 긴장이나 지금의 정치보다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한일 과거사 문제는 뒤로 미루자, 일본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확인도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미국 측의 발언은 다소 자기네들의 의도와는 달리 보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해명해 온 내용도 저희한테 알려 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무부 대변인 논평이라든가 성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 온 그런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밝혔던 그러한 인식을 다시 또 되풀이하면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자기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박수현 의원** 마지막으로 장관께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위안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난 4월 2일 날 펠로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 인식은 하고 계신데, 교황께서도 만나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왜 만나 주지 않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시기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90세 이상 고령자여서 시급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언제 자연스러운 시기가 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문제의식도 저희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장관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대통령께 잘 건의드리고, 이 문제를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께 정말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아픈 국민들을 안아 주시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남북 경제 교류·협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북 경제 교류·협력은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고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수현 의원** 그렇다면 남북 경제 교류·협력을 막고 있는 5·24 조치 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5·24 조치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5·24 조치 자체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짚고 넘어감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의원** 북한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리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일단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속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지금 5·24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하에서도 가능한 협력은 민족 동질성 차원에서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북한이 그러한 수준의 교류·협력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수현 의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24 조치 해제는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물밑 접촉이나 대화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북한이 사실상 5·24 조치 해제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긴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다양한 대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전단의 살포 등 남북 관계 현안에서 우리 정부가 더욱 성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런 관계를 풀어낼 것이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관께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소중한 자산인 역사적 교훈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략 부재의 외교를 미사여구로 포장하느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로만 ‘통일대박’이라고 하고 정작 통일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권 유지에 급급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경고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박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외교·안보·통일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약속된 날인데 모든 질문이 이완구 총리님 청문회 하듯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지난 1월 달에 한·요르단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여야 의원 4명이 요르단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요르단 국회의장이 ‘62년도에 대한민국과 요르단이 수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이 훨씬 잘살았다.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나라였다. 그런데 현재는 대한민국은 세계 열 번째 가는 그런 대국이 되었다. 자기들은 아직도 국민소득 5000불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나라이다. 그런 비결이 뭐냐?’ 이렇게까지 물었습니다.

정말 의원님들 외국에 나가 보시면 민주화·산업화 동시에 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외국에서 모두 대단한 나라로 보고 있는데 국내에만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로 늘 정쟁을 하고 나라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4월 달에 성완중 전 회장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메모로 남기는 바람에 온 나라가 광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인들은 ‘먹고살기에도 바쁘고 경제는 추락하는데 대한민국은 늘 이런 문제만 가지고 싸움을 해서 되겠느냐?’ 빨리 수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번 문제만큼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빠르게 수습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하는 과정에 선거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개혁특위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정치를 바꿀 거냐 하고 정치자금법도 바꾸고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토양에 현 제도가 뒤섞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털 수는 없지만 서로 이해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정말 깨끗하고 바른 나라로 가면서 살기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대통령선거 여기에 올인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문제가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제도를 좀 바꿀 때가 되었다. 그것은 뭐냐? 개헌을 통해서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의원내각제를 하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런 나라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교·통일 관련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보 관련은 뭐니 뭐니 해도 이와 같은 정치 불신이 있으면 안보가 어렵습니다. 또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입니다. 저는 안보는 곧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엄청 이루어져서 세계적인 기적을 이룬 나라지만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대기업은 돈을 많이 쌓아 놓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어렵습니다. 또 잘사는 사람 10% 안에 드는 사람과 하위층 10%에 속하는 사람 차이가 세계적으로 가장 차이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양극화가 계속되면 안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만 8000불이 넘는 그런 국민소득을 이야기합니다마는 5000불, 1만 불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때는 이와 같이 서로 간에 불만이 적었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보는 경제니까 경제는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 총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매우 힘드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아주 답답합니다.

○이철우 의원 저는 총리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정말 역사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답변이 총리님께서 총리를 떠나고 또 이 나라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남는 큰 인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 '30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진술돼서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리님은 "한 푼도 안 받았다. 만약에 내가 받았으면 총리직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또 우리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리부터 수사해라." 이 말은 많은 메시지를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역사와 대화한다는 각오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망자의 말씀이라도 진술 내용을 보면 목적이 있는 그런 메모와 진술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마치 무슨 망인을 사정 대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대단히 불만 섞인 그런 진술의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이것은 수사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부터 수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차제에 이 관련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망자가 진술한, 여덟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모든 망자와 관련된 것은 다 놓고 수사를 한 후에 이 문제가 밝혀져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우 의원 총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해서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말씀대로 한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만약 제가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 정도……

○국무총리 이완구 어떠한 증거라도 좋습니다. 어떠한 증거라도 만약 이완구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 정도 비장한 각오를 보여 주시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경우든 본인이 그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하여튼 총리님이 명백히 깨끗하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야지 이 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질문 해도 답변이 뭐, 머리가 깨끗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국무총리 이완구 뭐 괜찮습니다.

○이철우 의원 괜찮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이철우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총리님한테 제가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은 꼭 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통일을 준비하는 확실한, 선덕여왕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통 크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24 조치라든지 작은 것 가지고 북한하고 티격태격 싸워서는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공감합니다.

○이철우 의원 그리고 통일이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통일이 갑자기 오면 우리나라에 대한, 남한에 대한 SOC는 해결을 다 해 놔야 됩니다. 왜? 통일되면 북한에 하기도 바쁜데 남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중에 가장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철도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 의원 지금 대기업이 돈이 남아돌고 있는데 통일에 대비해서 대기업 투자도 이끌어 낼 겸 철도사업, 특별히 대통령께서 공약한 그런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착수를 해서 국가 경제도 일으키고 통일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각에 확실한 지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은데 오늘은 일단 그 정도 묻고 다른 장관들한테 여쭙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좀 나오십시오.

장관님, 북한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날리는 이런 개발 했다고 하고 핵도 소형화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슴푸레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소형화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철우 의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핵을 만약에, 소형화했다고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핵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핵을 가졌다고 해서, 핵을 가졌다는 것과 핵을 사용한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핵의 가공할 그런 파괴력을 생각해서 핵무기에 대한 대응은 핵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는 비핵화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연합방위체제하에서 소위 억제력을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한다, 그런 방침입니다.

○이철우 의원 그 방침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근 국가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들이 북한 핵을 해결하면 우리가 필요 없지만 핵을 해결 못 하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사실은 총리님께 전반적으로 좀 여쭙려고 했는데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이버는 전쟁 중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이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수원도 당하고 있고 그전에도 은행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심지어 청와대, 국정원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비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응은 공공영역에 있어서의 대응 또 민간영역에 있어서의 대응, 군사영역에 있어서의 대응, 그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최근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을 사이버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3개 기관 영역에 있어서의 대응을,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북한에서는 최고사령부 산하에 7개 해킹 조직을 가지고 1700명 해커가 있으며, 이 해커를 돕는 13개 TF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420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학생 때부터 해커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커 대비하는 보안요원을 양성도 안 할뿐더러 이러한 조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마는 저희도 군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포함해서 그러한 전문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대비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테러는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테러를 많이 당했습니다.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이것 다 테러예요.

그리고 4월 12일 날 리비아에서 우리 대사관이 공격받은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우 의원** 테러에 대비해서도 우리 테러법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총리님이나 장관님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외교부장관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교 관련해서 국민 평가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철우 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외교는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미국 틈바구니에 들어 있고 일본하고는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후퇴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러시아, 이번에 관련해서도 전승기념일에 오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장관님께서서는 최근에 우리 외교가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비쳤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먼젓번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저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냉전 이후 가장 어려운 그런 지정학적 안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에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고 또 그동안에 많은 현안도 잘 처리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비록 어려운 도전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하게 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관장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철우 의원** 외교에 자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는 만큼 나라 국력도 성장한 것은 틀림없고요.

저도 중국에 가 보면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높고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통일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되지 그냥 칭찬만 받고 말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잘 활용해서 통일 기반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한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가장 많이 성과를 봤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또 지난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때 중국으로부터 또 그 이후 러시아로부터, 최근에는 일본으로부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까지…… 거의 모든 주변국으로부터 저희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드레스덴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받았고요. 작년 12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남북한에 약간 등거리 정책을 취해 오던 아세안마저도 저희의 모든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다 전폭적인 지지를 해 왔습니다.

또 이런 것은 반기문 총장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고 전 세계 모든 지역 그룹들이, 중부유럽에 있는 비셰그라드 그룹까지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전을 보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다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철우 의원** 일본 관련해서, 특히 독도 조용한 외교를 해 왔잖아요. 우리가 시설물 하려고 하다 전부 취소하고 이랬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일본은 거침없이 공격을 해 오고 우리는 우리 거니까 가만 있으면 된다, 이랬다가 일본이 힘이 더 세져서 ‘야, 내나라’ 했을 때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사실 상당히 지나친 걱정들이 좀 있으십니다. 사실 일본이 일본말로 센카쿠 또 중국말로 다오위다오섬에 대해서 취하는 정책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독도에 대해서 취하는 정책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센카쿠가 자기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 아주 조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네들은 영토주권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서 저희의 영토주권은 분명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학술적 또는 지리적 자료들을 다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러면 외교부 정책이 맞다면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독도 입도 교육할 때라든지 독도 가보기 운동, 독도 밟기 운동도 박명재 의원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관련 부처랑 협조·협의를 해서 하여튼 앞으로 국민들께도 더욱 다가가는,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의 지위가 과거보다 훨씬 낮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철우 의원** 변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철우 의원** 그런데 장관 취임하시기 전에 이상한 말들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통일부장관은 아무나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통일부가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확실히 내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지금까지 성장을 잘 해 왔는데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는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께서 어떻게 하면 통일할 수 있는지 작은 것들 가지고 티격태격 싸움해 가지고 통일 되겠느냐, 물밑 접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표는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이 나라 역사의, 대한민국을 통일을 해서 세계적인 최고의 국가를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저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유념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선언, 8·15 경축사 통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철우 의원** 했는데, 북한에서 하나도 안 받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 오는 게 있는지 정말 국민들이 ‘야, 통일부가 하는 일이 통일을 위해서 기반을 잘 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첫 번째로 드레스덴 구상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5 경축사에서 3대 통로를 얘기를 했고요. 또 엇그저께 대통령께서 물 국제회의 관련 말씀에서 하천관리를 통한 긴장 완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존의 환경 협력의 통로를 보다 구체화한 방안이고, 통일부에서도 산림 협력이라든지 관련 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방안들을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실행하기 위한 대화를 북한에게 계속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북한이 지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선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교류와 협력이라도 확대하자 그런 차원에서 민간단체들의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통일이 우리의 살길이다’ 노래로

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앞장서 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들어가십시오.

저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통해서, 압축성장 때문에 지금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통은 어차피 겪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수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된, 영광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함께 정말 노력해서 이 나라를 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垠希 議員**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광산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른 척했던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돈의 욕망에 충실한 탐욕스러운 자본, 이 자본과 결합한 부패한 공직자,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국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국가와 정치는 더 이상 존립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최고책임자입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權垠希 議員** 이런 막중한 임무가 있는 총리와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권 최고 실세들이 모두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초유를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책을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 말입니까?

○**權垠希 議員** 예.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權垠希 議員** 직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겠냐며 냉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고인이 메모와 함께 육성으로 남긴 녹취록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權垠希 議員** 국무총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權垠希 議員** 지금 답변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개인의 입장으로 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국무총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관련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權垠希 議員** 여전히 사인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잘 구별이 안 되시나 본데요.

총리, 국무총리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대응 보도자료를 4월 10일에 냈지요? 4월 10일 총리실 대응 보도자료 기억 안 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垠希 議員** 당시 총리의 직무 수행과 국무총리의 직무와 무관한 과거 이완구 총리 개인의 비리의혹과 관련한 일에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보도자료를 총리실에서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총리는 공보실 기능이 있습니다. 총리의 서면 또는 구두 지시에 의해서 총리 공보실은 총리를 대신해서 낼 수 있습니다.

○**權垠希 議員** 업무와 관련해서 보좌하기 위한

기능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넓은 의미의 총리 업무와 관련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垠希 議員 그 부분 역시 구별이 잘 안 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지요. 왜냐하면 총리가 국무총……

○권垠希 議員 회사의 대표가 개인의 비리로 수사를 받을 때 회사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것 역시 배임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구별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직 국무총리가 일단은 관련된 그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공보실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권垠希 議員 그것은 이완구 총리의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자신의 입장을 보도하기 위해서 총리실의 그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어제와 오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성완중 전 회장과 친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사실 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친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분명한 것은 2006년도 제가 도지사 선거 때 후원금 받은 바 없고 2013년, 14년 후원금 받은 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완중 회장은 동료 의원들에게도 후원금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제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2013, 2014년도에 같은 동료이기는 했습니다마는 후원금 한 푼 안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권垠希 議員 후원금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오늘 언론에 성완중 전 회장의 다이어리 비망록이 공개가 됐는데 보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垠希 議員 오늘 모 언론에 성완중 전 회장의 다이어리 비망록에 담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보도가 됐는데 보셨나요, 내용을?

총리께서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셨다던 2012년 10월 13일 점심 때 서울 메리어트호텔 중식당에서 성완중 전 회장을 만났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몇 월 달에요?

○권垠希 議員 2012년 10월 23일 12시 30분.

○국무총리 이완구 그때는 신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암으로 해서 탈모가 다 돼 가지고, 그때는 외부 외출이 불편할 때입니다. 병원기록을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활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머리가 전부 다 빠져 가지고 조금이라……

죄송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탈모 사진 좀 가져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활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권垠希 議員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모 언론에 이러한 보도가 됐는데 2012년 10월 23일 성완중 전 회장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 이것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의원님, 지금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게 사진인데, 이게 제가 아마 8월·9월·10월 달 머리가 완전히 다 빠진 상태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고 있는 상태의 제 모습입니다.

○권垠希 議員 몸이 안 좋으실수록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몸이 이런……

○권垠希 議員 그래서 답변이, 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예, 아니요’로 해 주신다면……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垠希 議員 ‘만난 사실이 없다’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垠希 議員 지금까지 13, 14일 기억의 번복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없습니다.

의원님, 이런 상태에서 사람을, 제가 성완중이라는 사람을,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이 무엇을 만나겠습니까?

○**權垠希 議員** 예, 알겠습니다.

만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어제와 오늘 대정부질문에 서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 구체적으로는 유세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사실이 아니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유세는 중앙 단위에서 선거에 관여하지,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 당시는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또 제가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중앙당에 제가 명단에도 없었고, 다만 당에서는 충청권의 ‘명예’ 자리를 붙여 가지고 당직을 발표했던 것 같고, 또 제가 실지로 이런 몸 상태에서 무슨 활동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충청권 사람들이 다 알지요, 제 이 발언에 대해서.

○**權垠希 議員** (사진을 들어 보이며)

2012년 대선 때 유세를 한 모습이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충남모바일방송 출처를 통해서 보여 주는 총리의 모습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2012년 12월 달 법정선거운동 기간에 병천에서 한 몇 분 정도 그리고 세종시에서 발대식에 잠깐 가서 얼굴 비친 것하고 12월 18일 날 천안 유세장에 가서 서 있었던 것, 세 가지로 기억이 됩니다.

○**權垠希 議員** 유세를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유세를 한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權垠希 議員** 유세를 하셨는데, 최초 의원님들의 질문에는 ‘유세장에는 한두 번 간 적 있으나 유세는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다가 지금 사실관계가 진술이 바뀌신 겁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마 그 내용에도, 저도 봤는데 ‘몸이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이라는 그 내용이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유세를 했다고요. 유세를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기서 질의할 사람이 해」 하는 의원 있음)

(「총리! 거짓말이 한두 번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예요?」 하는 의원 있음)

○**權垠希 議員**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거짓말하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분명히 2012년 대선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선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대선에 관련하지 않았습니다.

(「유세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부의장 정갑윤** 의원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끝까지 들어 보시고……

○**국무총리 이완구** 세상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총리, 잠깐만 기다리세요. 총리,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한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좀 자제해 주세요.

자, 그쪽도 좀 자제해 주세요.

(「유세를 했는데……」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나중에 판명 다 하면 되잖아요.

억울하면 나와서 질문하세요, 질문을!

(「질문을……」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조용히 좀 하시고.

○**국무총리 이완구**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세상에 몸이 이런 상태에서 누가 관련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부의장 정갑윤** 질문은 권은희 의원이 하세요.

○**權垠希 議員** 총리!

(「그런 상태로……」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자, 조용히 좀 계세요.

○**權垠希 議員**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후원금을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단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도 내용 보셨지요? ‘2013년 재보궐선거 때 3000만 원 현금을 지급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지요?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어제 총리의 말이 사실일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말씀대로 3000만 원을 줄 정도가 되면 2013년, 2014년 후원금이라도 저한테 쥐야 되겠지요.

다른 의원님들은 후원금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받은 분.

(「공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건 뭐 야당 의원님들께 물어보십시오.

(「겁박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공식적인 후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저도 동료 의원들의…… 아니, 동료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후원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동료 의원님들 이름을 거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선관위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불법적인 돈을 건넸다고 고인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의장 정갑윤 자, 박홍근 의원님……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요, 선관위 가면 알 수 있어요.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거기다 야당 의원을……)

○부의장 정갑윤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국무총리 이완구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부의장 정갑윤 질문은 우리 권은희 의원이 합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權垠希 議員 총리,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셨겠지만……

(「물타기라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자, 좀 기다리세요.

○權垠希 議員 이 본회의장의 상황에서도 보셨겠지만 동료 의원들조차 어디까지가 총리의 말이 사실이고 어디부터 거짓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가려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내용 또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사인 이완구가 말씀하시는 지 국민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불편해하고 피곤해하고 계십니다.

총리, 이러저러한 말로, 자주 바뀌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정 최고책임자 중의 한 명으로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책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결단을 국무총리로서 내려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목적 있는 진술과 목적 있는 그 여러 가지 증거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영향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權垠希 議員 국민적인 의혹과 국민적인 혼란이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혼란을 수습하고 그 의혹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총리는 맨 먼저 어떤 경우라도 검찰의 수사를 받겠습니다. 총리는 증거가 나오면 고인이 저에게 준, 육하원칙에 의해서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과도 바꾸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權垠希 議員 지금……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직 정도가 아니라 제 목숨과도 바꾸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저는 단호합니다. 저는 단호합니다.

○權垠希 議員 저희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생명을 원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고인이……

○權垠希 議員 정의를 이야기하고 국무총리로서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태도 역시 국무총리로서의 국정 책임자의 그러한 진중한 태도가 아니라 사인 이완구의……

○국무총리 이완구 국민에게 적어도 총리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총리의 확실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權垠希 議員 국민이 총리에게 바라는 것이 행정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운영을 원하고 진중한 태도를 원하는 것이지 본인의 목숨을 운운하면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답변 태도는……

○국무총리 이완구 그만큼 이 사안이……

○부의장 정갑윤 자, 총리……

○權垠希 議員 사인 이완구로서의 답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권 의원님, 잠깐만.

총리께서는 권은희 의원의 질문에만 답을 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좀 자제하시고, 질문은 권은희 의원이 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질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權垠希 議員** 결단을 보여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보여 주실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러한 행동을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되풀이 말씀드립니다. 총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수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서 어떠한 증거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언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權垠希 議員** 지금 막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께서 수사는 수사논리대로 한다, 정치의 논리나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수사를 제일 먼저 받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신뢰를 주기 위한 행동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결단을 보이실 생각은 없다면, 본인이 계속 국무총리 직책을 수행을 하신다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이러한 태도는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와대와 총리실에 검찰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막중한 자리에 있는 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책임 없는, 증거 없는, 근거 없는 그러한 음해에서 공직자들의 위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權垠希 議員** 저희 국민들은 수많은 역사적 경험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냉정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현명한 국민들입니다. 그러한 국민들에게 불고 있는 이러한 우려의 시선을 그런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결코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 청와대와 총리실에 지금 검사가 파견 나

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垠希 議員** 총리실에는 현직 검사가 파견 나가 있고……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 분 나와 계십니다.

○**權垠希 議員** 청와대에는 현직에 있던 검사 사표를 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파견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계속 총리실과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 또한 국민들에게는 수사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본인이 국무총리직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총리실과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을 원대복귀시키는 조치라도, 그러한 행동이라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權垠希 議員** 무엇을 생각할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규정도 좀 살펴보고요.

○**權垠希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답변을 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垠希 議員** 총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책에 대한 질문은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장관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지난 국정감사 때 탐색구조본부 관련하여 지적받았던 문제들 기억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탐색구조본부의 초기 활동에 있어서 군과 해경 또 여러 가지 기타 지원요소 간에 원활한 협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權垠希 議員** 그뿐만 아니라 지휘체계, 군내 지휘체계의 혼선 그리고 탐색구조부대가 진해에만 지정되어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이동수단과 부대가 격리되어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매뉴얼 자체가 너무 느슨하다라는 문제점, 그리고 실전 대비 훈련이 평소에 없었다라는 문제점 등을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그 이후에 통합방위체계 정립을 통해서 군 자산뿐 아니라 민관의 자산이 그런 탐색구조의 초기 골든타임을 최대한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군내에서는 그 당시에 작전요원과 작전요원을 현지에 실어다 줄 헬기전력과 상이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더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한곳에, 작전병력이 있는 곳에 헬기부대를 이동시켜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權垠希 議員**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동수단 확보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과 같이 재난 발생 시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탐색구조본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완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權垠希 議員** 국방부는 이렇듯 탐색구조본부에 대한 대책 마련은 소홀했던 반면 엉뚱한 곳에서 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權垠希 議員** 왜 나왔고, 어떤 내용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탐색구조본부는 군에서는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군이 탐색구조본부를 주도하는 관계는 아니고, 그래서 지원 문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통합방위체계와 관련해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준비가 된 조직·집단이 군인데 군이 통방 사태가 되면 여러 가지 상황도 재난상황을 포함해서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때 민·관·군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한 7개 분야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權垠希 議員** 이러한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이 나온 근거는 국가위기 개념이 다변화되어서 이러한 재해·재난과 같은 개념까지 다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權垠希 議員** 그리고 이런 다변화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權垠希 議員**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재난 발생 시에 통합방위 사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군의 초기 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러한 내용의 개선책을 내놓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현장에, 군이 가장 빨리 현장에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도달할 수 있는 부대니까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필요하면 바로 재난구조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權垠希 議員** ‘필요하면’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군이 민간영역에 개입할 수 있고 민간영역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정확하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현행법상 통합방위사태가 아닌 경우에 군에 대한 지원 요청 없이 군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출동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방사태’라고 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어서 군이 그러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權垠希 議員**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준비해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재정립 방안은 국가위기 개념을 재해재난 사태까지 확대를 하고 이러한 재해재난 사태에도 군이 통합방위 사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군의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자발적으로 투입을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군이 투입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 문제는 군이 독자적으로 혼자 관이나 민에서 요구가 없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데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국민안전처와 협조를 해서, 국민안전처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權垠希 議員** 그러면 그 표현이나 그 보고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국방부의 정확한 입장은 현행법대로 국방부는 통합방위 사태가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군에 대한 민간의 지원 요청 없이 군이 출동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은 출동 준비를 항상 갖추고, 당연히 그런 재난 사태가 나면 그것을 주

도하는 국민안전처가 군에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요청에 가장 신속하게 출동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군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權垠希 議員** 국민안전처의 그러한 요청을 떠나서 국방부의 입장은, 지금 보고된 입장은 군이 자발적으로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지금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건데 국방부장관께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이 문민통제 원칙을 위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 법적인 뒷받침이 있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러한 적극적인 준비 태세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權垠希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방위 사태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방금 국방부장관께서 얘기하신 그런 범위이고 전혀 군의 자발적인 출동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장관, 구조적인 방산 비리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니 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는 개인적인 일탈에서 빚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체의 그러한 과도한 부당이득 추구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방사청이나 군 관계기관에서 사업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히 방위사업 또 군수조달 이런 것들이 수요자인 군과 공급자인 업체 사이에 쌍방 독점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거기에 많은 비밀사업들이 있고 비밀에 대한 정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리의 개연성이 높아서, 대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이 세 가지 큰 요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또 사업을 관리하는 그러한 우리 요원들의 전문성 또 도덕성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權垠希 議員** 군이, 방위사업청이 마련하고 있는 방산 비리 대책과 관련해 지금 장관이 얘기

하고 있는 대책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았는데 군피아를 차단하기 위한 TF 실태 정기조사라는 부분은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후적 문제해결책에 불과하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청렴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청렴서약 제출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은 이규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기중개거래 계약상에 대한 청렴서약제출서까지 확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형식적인 보완책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산 비리 대책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평가이고요.

이러한 군피아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서 역시 청렴서약서를 받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되고 군사기밀 유출 등 비리 연루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묶어서 이른바 강력한 ‘이규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앞서 답변드린 방위사업비리 개선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합동수사단의 수사 또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수사와 감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權垠希 議員** 예,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의화** 권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송파병 출신의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 김을동 의원입니다.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에게도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귀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통한과 슬픔으로 새긴 세월호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선진 대한민국의 염원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남북이 현명하게 힘을 모으고 지혜롭게 협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간 남북의 소모적인 무력 대치와 긴장 상태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성과 불안정한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굳건한 안보역량은 필수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외교부장관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이 일삼는 행보를 보면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외교청서에서 8년 연속으로 꺾변을 되풀이하고 교과서에까지 이렇게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아베의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망동은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략이 도대체 뭔지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용한 외교만 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 독도의 홍보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미 수년 간 일본은 100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해서 자국의 해외 공관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국제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말로만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지, 여기 전반에 관해서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까 앞선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는 외교를 조용한 외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도 저희가 국제사회의 양심세력 또 정의세력과 공조를 해서 이러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 퇴행적인, 역사 수정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계속 여론을 환기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최근의 예를 들면 바로 지난 1월 말에 뉴욕타임스가 크게 실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알리기를 저지하려는 아베 정부의 시도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유수 언론의 보도뿐만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 또 각국의 의회 결의안들, 또 역사학자들의 공동성명 등등 수없이 많은 그런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직접·간접으로 이러한 여론을 환기한 데에 따른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국민들과 더불어서 이런 독도 문제에 대해서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또 여타 역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하는 그 이유가 침략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정도로 대응해서는 일본의 그런 야비한 전략을 넘어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접근 방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취하거나 취하고 있거나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많은 양심세력과 같이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의 그런 분쟁지역화 전략 이런 데는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앞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예를 들면 일제침탈사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이런 것도 하면서…… 작년 말에는 또 국제회의를 크게 해 가지고 여론을 환기한 바도 있습니다.

○**김을동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님께도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입도시설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입도시설 하자,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부가 약하게 해 가지고 일본한테 지금처럼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은희 의원님 발언에 우리 총리께서 목숨까지 내놓으시겠다 하는 각오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정말 이것은 돌아오지 않는 망자를 향해서 국민들이 ‘설마 죽기 전에 거짓말을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그것 때문에 아주 기정사실화해서 이런 말이 도는 것 같은데, 지금 총리님의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충청포럼에 수많은 충청 정치인과 언론인이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망자와 아주 심한 송사를 벌여서 망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예. 그러니까 별로 감정이 좋을 턱이 없지요.

그리고 2009년 12월 3일 날 저는 도지사를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망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다 저는 2012년 암에 걸립니다, 2012년 초예. 그래서 2012년 말까지 1년 동안 저는 투병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망자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도 없고.

2013년 4월 달에 보궐선거에 제가 당선이 되어서 들어와 보니 선진당과 한나라당이 합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망자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국회의원 동료로서.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인데, 이번에 금년 3월 12일 날 총리 담화가 있고 3월 18일 날 압수수색영장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총리가 주도로 하는 사정에 제1호 타깃이 되었다고 감정을 가진 것 같아요.

본인의 주장과 충청포럼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총리 청문회 때 수천 장의 플래카드를 충청포럼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었을 텐데 왜 갑자기 불과 몇 달 만에 저 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이 이 녹취록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굉장한 섭섭함과 어떤 목적의식 있는 메모 내

지는 진술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이분과의 관계 없습니다, 금전관계가.

그렇다면 이 목적 있는 진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망자의 말씀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이런 저런 얘기 한다면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어떠한 증거에 입각한, 육하원칙에 의한 증거에 입각한 게 나온다면 총리직이 아닌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을동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데 답변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괜찮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총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실은 덮을 수 없고 역사왜곡은 준엄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당시 총리의 강력한 발언에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전담 부처들도 일본 역사왜곡에 대해서 총리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외교부장관님께서도 영토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하실 거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지난번 11월에 정홍원 전 총리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계획을 돌연 취소해 가지고 백지화했었습니다. 이게 국가의 영토 주권을 지키는 일인데 이런 중차대한 국가정책을 실현하면서 오락가락하게 반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리고 외교부가 이것을 핑계를 대면서, 환경 문제, 안전 문제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국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지킬 때만 안전이 있고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공사를 재추진하겠다는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외교부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눈치 외교, 굴욕적 외교가 아니겠느냐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일본 눈치 보는 것 없고요.

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입도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안전관리 문제라든가 또 생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지금 현재 방문객이 1년에 한 이삼십 만가량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안시설 부족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살펴보시지만 방파제 공사부터라도 시작해서 우리 국민이면 여기를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도지원센터는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아베의 이성을 잃은 행태와 군국주의 부활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를 연상시킬 정도인데요. 또 아베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을 도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을 돕는다는 빌미로 군사 강국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이러한 만행, 과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전쟁 동아시아 피해 국가들에게 저지른 악행들을 저는 전 세계에 낱알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일제 만행 사진전을 지금 전 세계에 순회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전 세계에다 홍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김을동 의원** 이게 정말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때까지 진정 중단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일본 위안부 동원의 부당함과 일제 만행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일제침략만행기록관 건립을 내가 총리님께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을동 의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독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립기념관에서 독도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도 협소하고 또 이것을 국민 전체에 홍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현재 서울에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을 활용해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 학생들은 독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리고 지금 총리께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지 않습니다. 종전 70주년, 일촉즉발의 전쟁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군사 전력은 다른 분쟁 지역 국가들과 차원이 다른데요. 한반도에 재앙이 오면, 한반도의 전쟁은 인류에 대재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가 현재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구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평화적인 방법인 한반도에다 유엔 제5사무국의 유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 전 세계에 알리고 한번 호소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을동 의원** 지금 여러 나라에 제 사무국이 있는데요. 유엔사무국이 아세아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분쟁지역인 우리나라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통일시대에 통일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부담되는 것은 이제는 통일 비용이 아니라 분단 비용도 따져야 할 때이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과감히 내디뎌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통일로써 얻은 편익과 이득이 훨씬 크지만 통일에 소요될 천문

학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통일비용 조성의 한 방편으로,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혹시 통일복권 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을동 의원 우리가 통일비용을 만드는 것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징수의 방법이지만 이것은 국민 전체가 참여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제가 짧게……

○김을동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앞서 의원님들께서 2012년 대선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김성태 의원님께서 어제 “2012년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대선에도 관여하지 못했던 것……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고요.

또 민병주 의원님께서 “대선 당시 선거 관련해서 어떤 직책 같은 것을 맡지 않으셨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에, 제가 속기록을 보니 “유세장에는 한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 선거 활동은 혈액암 투병 과정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요지는 대선 활동에 제가 관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고 유세 과정에 한두 번 갔다는 것은 여기에 어제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을동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군 방산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이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정말 철저한 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함과 동시에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단단한 조치를 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계속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 맡겨 놓는 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GDP 대비 3%인데 비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현재 2.5%에 불과합니다, 국방 예산이. 여기에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는 자기를 지키지 않는 나라를 절대로 지켜 주지 않습니다. 역사는 절대로 자비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경고를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단군 이래에 최고의 번영을 이루고 세계 속으로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평화롭게 살아갈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영희	김경협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김세연	김승남	김영주	김영환	강석훈	강희동	강창일	강창희
김용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강대수	강성동	강은희	강권희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진태	강경협	강관영	강광진	강기선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현	김현숙	나경원	나성린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박성호	박완주	박인숙	박홍근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배덕광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설훈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김현숙	김희선	나경원	나성린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정훈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제세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은혜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언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박지원	박홍근	배덕광	백균기
이원욱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인재근	임내현	장윤석	전병헌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세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정태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호영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홍중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황주홍	황진하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박대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82인, 기권 의원 없음)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출석 의원(267인)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걸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순 욱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찬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흥	황 진 하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전 순 욱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미 경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의 화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흥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의 락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진 하	

○속개 시 재석 의원(70인)

강 기 정	김 경 협	김 도 읍	김 명 연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세 연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제 식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한 표	나 성 린	도 종 환
류 성 결	민 병 주	민 흥 철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인 숙
박 흥 근	배 덕 광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영 교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염 동 열
우 윤 근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재 욱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개 호	이 상 직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원 욱	이 이 재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종 배	이 종 훈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한 성	이 현 승
인 재 근	임 수 경	전 순 욱	전 해 철
정 갑 윤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최 동 익	최 민 희	한 기 호	한 명 숙
홍 의 락	홍 철 호		

○개의 시 재석 의원(131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김 경 협
김 기 식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우 남	김 정 록	김 제 식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흥 근	배 덕 광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영 교	서 용 교	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정 훈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재 욱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노 근	이 명 수	이 목 희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산회 시 재석 의원(61인)

경 대 수	권 은 희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제 식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명 재	박 병 석	박 완 주	박 인 숙
박 흥 근	배 덕 광	서 영 교	손 인 춘
송 영 근	심 재 권	안 규 백	염 동 열
우 윤 근	원 유 철	유 승 민	은 수 미
이 노 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현 승	임 수 경
전 병 현	정 두 언	정 의 화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호 영	최 민 희

추미애    홍일표    홍철호    황인자  
황주홍

○청가 의원(11인)

강동원    길정우    김동철    김영록  
김희국    김희정    문재인    박혜자  
송광호    유일호    최경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형준  
입법차장                    구기성  
의사국장                    장대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완구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보고사항】

○의안 제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4. 13 정부 제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이자스민·김우남·인재근·조명철·김상훈·류지영·강은희·이한성·정희수·양창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김광진·김영록·이개호·황주홍·주승용·부좌현·전해철·박홍근·조정식·오제세·설훈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이장우·이한성·박수현·이철우·이이재·박성호·김도읍·박덕흠·이종배·박상은·이재영·김성태·이우현·김태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김성찬·김태원·송영근·김정록·박맹우·문정림·박명재·김태호·박대출·백군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2015. 4. 13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 제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박홍근·조정식·김성주·박수현·

진성준·임수경·박혜자·이원욱·홍익표·설훈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민홍철·조경태·이찬열·원혜영·부좌현·최원식·박주선·문희상·김영록·신정훈·김성곤·박남춘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정희수·이노근·김태환·손인춘·이철우·송영근·권은희·김상훈·이자스민·이명수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강동원·이찬열·김춘진·김성주·김윤덕·최규성·이개호·유성엽·박민수·김관영·이상직·이춘석·전정희·민홍철 의원 발의)

이상 4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4. 4. 13 김도읍·장윤석·이병석·정갑윤·서용교·김태흠·이장우·조명철·김진태·박창식·강은희·류지영·김기선·윤영석 의원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강석훈·나성린·박맹우·김광림·조명철·이만우·박명재·정문헌·박덕흠·류성걸·정희수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정희수·이노근·김태환·김종태·손인춘·송영근·권은희·김상훈·이자스민·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신성범·장윤석·경대수·주영순·서용교·이종훈·김희선·박창식·김도읍·김재경·홍문표·박덕흠·이인제·민현주·김상훈 의원 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박광운·이원욱·이목희·심상정·

김관영 · 김광진 · 김성곤 · 이개호 · 최재성 ·  
박남춘 · 부좌현 · 김기식 의원 발의)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보고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2014연간보고서**

(2015. 4. 10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4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송부